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 이해를 위한 경제교육 핵심 개념 도출 연구

송인호·주호성·공은주
김은숙·정성진·곽지용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 이해를 위한 경제교육 핵심 개념 도출 연구

송인호 · 주호성 · 공은주
김은숙 · 정성진 · 곽지용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 이해를 위한
경제교육 핵심 개념 도출 연구

저 자

- 연구총괄 **송인호** | 한국개발연구원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
주호성 |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
공은주 |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
김은숙 |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
정성진 |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
곽지용 |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1
제2장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한국 사회 적응 실태	14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현황과 지원 실태	15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현황	15
2. 북한이탈주민 지원 실태	21
3. 북한이탈주민 대상 적응 교육 현황	30
제2절 북한이탈주민 시장경제 이해 및 적응 실태	41
1.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 이해 실태	41
2. 북한이탈주민 한국 사회 적응 실태	45
제3장 북한의 경제체제와 남북한 경제교육 비교	53
제1절 북한의 경제체제	53
1.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53
2. 북한의 경제정책	57
3. 북한의 시장화와 경제생활의 변화	59
제2절 남한과 북한의 경제교육	66
1.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	66
2. 북한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의 경제교육 내용	69
3. 대한민국의 학교 경제교육	77

목차

제4장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83
제1절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도출 과정	83
1.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초안	83
2.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수정안	87
3.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최종안	89
제2절 영역별 학습 개념	93
1. 남북한 경제체제 이해	93
2. 시장경제 이해	95
3. 국가 경제 및 국제 경제 이해	99
4. 금융 생활 이해	101
5. 현장 실습 및 상담	105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06
참고문헌	109
부 록	112

◆ 표 목 차

<표 2- 1> 개별 면담과 FGI 실시 및 참여자	14
<표 2- 2> 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2022년 기준)	26
<표 2- 3>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 과제와 관련 기관(2020년)	29
<표 2- 4> KDI의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프로그램 주요 내용(2024년 기준)	35
<표 2- 5> 『현명한 소비, 행복한 미래』 목차	36
<표 2- 6> 『내 돈을 지키는 사기피해 예방법』 목차	36
<표 2- 7> 『똥똥이와 삼녀의 금융생활 정착기』 목차	38
<표 2- 8>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금융생활 길잡이』 목차 및 주요 내용	39
<표 2- 9> 대상별 경제·금융 이해력 점수	42
<표 2-10> 북한이탈주민 경제 이해력 수준	42
<표 2-11> 미시경제 분야 북한이탈주민 경제 이해력 정도	43
<표 2-12> 거시경제 분야 북한이탈주민 경제 이해력 정도	43
<표 2-13> 국제 경제 분야 북한이탈주민 경제 이해력 정도	44
<표 2-14> 금융 분야 북한이탈주민 경제·금융 이해력 정도	44
<표 2-15> 일반 국민 대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주요 지표	46
<표 3- 1> 북한 경제 관리 체계의 시장화 정도	64
<표 3- 2>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의 주요 구성 및 내용	67
<표 3- 3> 혁명 교양과 사회주의 교양에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것	68
<표 3- 4> 북한 소학교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의 경제 관련 단원	70
<표 3- 5> 북한 초급중학교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의 경제 관련 단원	72
<표 3- 6> 북한 고급중학교 사회주의 도덕과 법 교과서의 경제 관련 단원	74
<표 3- 7> 사회과 교과의 경제 교과 내용 요소	78
<표 3- 8> 초등학교 사회 교과의 경제 단원별 성취 기준	79

표목차

<표 3- 9> 중학교 사회 교과의 경제 단원별 성취 기준	80
<표 3-10>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의 경제 단원별 성취 기준	81
<표 3-11> 고등학교 경제 교과의 단원별 성취 기준	82
<표 4- 1>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초안	86
<표 4- 2>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수정안	89
<표 4- 3>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최종안	91
<표 4- 4> '남북한 경제체제 이해' 영역의 학습 내용	94
<표 4- 5> '시장경제 이해' 영역의 학습 내용	97
<표 4- 6> '국가 경제 및 국제 경제 이해' 영역의 학습 내용	101
<표 4- 7> '금융 생활 이해' 영역의 학습 내용	104
<표 4- 8> '현장 실습 및 상담' 영역의 학습 내용	105

◆ 그림 목 차

[그림 2- 1] 북한이탈주민 규모	16
[그림 2- 2]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	17
[그림 2- 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거주 기간별 비중	18
[그림 2- 4]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별 비중	18
[그림 2- 5]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 계획(2023년)	30
[그림 2- 6] 하나원의 사회 적응 교육	31
[그림 2- 7] KDI · 한국소비자원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간한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자료 표지 ...	35
[그림 3- 1] 북한의 4단계 경제 계획 작성 과정	54
[그림 4- 1]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개발 과정	84

요 약

제1장 서론

-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강조한 것처럼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데 정치적·경제적 제도가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수상자들은 그들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사례를 든 것처럼 남한과 북한이 선택한 제도가 두 국가의 정치·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함.
 - ‘포용적 제도’를 선택한 남한은 다수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 경제성장을 이끈 반면, ‘착취적 제도’를 선택한 북한은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면서 국가의 장기적 번영을 저해한 것으로 분석됨.

- 1994년 북한의 경제난 이후 크게 증가한 북한이탈주민은 정부의 보호와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는 계획경제체제에서 생활해 온 북한이탈주민이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파악됨.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시장경제 관련 교육이나 건전한 금융 생활을 경험하지 못해 소득과 소비, 자유와 경쟁, 자산 관리의 중요성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맞춤형 경제 핵심 개념과 내용 요소를 도출하여,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 자료 제작과 교육 프로그램 기획·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행되었음.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경제교육은 대부분 실생활과 관련된 개인 금융교육에 그치고 있음.
-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경제교육 핵심 개념이 향후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제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램.

제2장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한국 사회 적응 실태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현황과 지원 실태

- 2024년 6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4,183명에 이르며, 북한에서 식량난이 발생한 1994년부터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크게 증가하다가 최근 감소하였음.
- 특히 2003~2011년에는 연 입국 인원이 2,000명대에 이르렀다가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며, 2020~2022년에는 팬데믹으로 급감하였음.
- 북한이탈주민의 구성 비율을 보면, 거주 기간별로는 10년 이상인 사람(72.2%)이 가장 많고, 연령별로는 40대(27%)와 50대(26%)의 비중이 높으며, 성별로는 남성(24.7%)보다 여성(75.3%)이 많음.
- 이들의 탈북 동기는 식량 부족과 통제에 대한 불만, 자녀를 위해서 등으로 나타났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와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음.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기 정착금, 주거, 취업, 사회 보장, 교육, 상담, 보호 담당관 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을 위해 정착 지원, 생활 보호,

취업 및 교육 지원, 통일 미래 리더 양성,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하나센터는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신속한 지역 사회 적응과 자립 및 자활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음.
- 경기도, 서울시 등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업 및 지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하나원과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돕기 위해 사회 적응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KDI,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들은 이들을 위한 경제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 하나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직후 12주(400시간) 동안 사회 적응 교육을 제공하며, 경제와 관련된 내용은 취업과 재무 관련 분야임.
- 하나센터에서는 최초 1년 이내 50시간 교육을 제공하며, 경제교육은 은행 이용, 예·적금 및 금리, 보험, 적금, 청약, 금융 상품, 대출, 금융 사기, 채무 해결 등 개인 금융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KDI, 예금보험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는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자료 제작을 수행하고 있음.

제2절 북한이탈주민 시장경제 이해 및 적응 실태

□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보다 경제 이해력과 금융 이해력이 낮으며, 경쟁과 노력에 기반한 보상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최고 경영자와 노동자의 임금 격차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등의 모순적인 태도를 보임.

-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거시경제 분야 이해력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미시경제 분야는 교환과 이득, 경제 주체, 공공재 등에 대한 이해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 이자율, 인플레이션, 수익률과 위험도 부분에서 일반 국민과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반면, 기간산업을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일반 국민의 2배 수준으로 높게 조사됨.

□ 계획경제체제에서 경제 관련 지식이나 기술 없이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의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반 국민과 큰 차이가 없지만, 일용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임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취업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지만 직업을 대하는 인식 차이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은 이들의 노동시장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이탈주민은 금융 생활과 금융 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금융시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들의 낮은 금융 이해력은 미흡한 재무 관리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교육 관련 담당자들은 전문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개인 금융교육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제언함.

- 북한이탈주민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구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움.
- 이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때 필요한 지식이나 역량을 스스로 파악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음.
- 직업을 구하기 위해 정부 지원 직업 훈련 교육을 받지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업 후에도 소통과 문화 차이로 적응에 곤란을 겪고 있음.
- 한국의 금융제도나 기관,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금융 사기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과 함께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함.

제3장 북한의 경제체제와 남북한 경제교육 비교

제1절 북한의 경제체제

□ 북한은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토대를 둔 계획경제체제와 사회주의 대가정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집단주의 원칙을 구축하고 있음.

- 북한식 계획경제체제는 당과 정부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기업이 생산하는 세부 생산물까지 계획하는 '계획의 일원화 및 세부화'로 요약할 수 있음.
-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 따라 생산 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며, 근로자의 임금이나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 등 일부만 개인 소유로 인정하고 있음.
- 북한 주민들은 수령을 아버지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구성원으로, 아버이인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한다고 교육받고 있음.
- 북한은 주민들에게 개인적 목표 가치보다 집단적 목표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북한의 경제정책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중공업 우선 정책, 경제·국방 건설 병진 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북한의 자원과 인민의 힘만으로 발전하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은 선진 기술과 해외 자본 도입이 어려워 경제성장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중화학 공업은 해외 자본과 기술의 지원이 없는 폐쇄경제에서는 육성이 불가능하므로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북한에서는 생필품을 비롯한 심각한 물자 부족 문제가 발생함.
- 국방 부문에 과잉 배분된 예산은 산업 불균형과 소비재 산업 발전의 위축을 초래하였으며,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음.
-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김정은 집권 이후 '정면 돌파'와 '자력更生'을 내세운 경제정책을 추진했으나 대북 제재, 자연재해,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1994년 발생한 경제난과 대기근으로 계획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암시장의 활성화, '돈주'의 등장, 시장 가격 형성 등 시장경제가 일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1990년대에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국가 배급제 유지가 어렵게 되어 시장 기능이 확대되면서 경제 제도와 현실 경제 간의 괴리가 해소되기도 하였음.
- 경제위기 이후 암시장과 장마당에서 부를 축적한 '돈주'가 기업소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며 경영활동을 하거나, 자금을 융통해 주고 이자를 받는 북한판 화폐 자본가로 변모하는 상황이 발생함.

- 2002년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이후 기업의 경영 자율권 확대, 상점의 이원화, 시장 가격 형성, 노동 결과에 따른 보수의 차등 지급 등 국가 통제 밖에서 자생 발전한 시장경제적 요소를 계획경제제도에 편입하는 것을 시도함.
- 이와 같은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에도 변화를 불러옴.

제2절 남한과 북한의 경제교육

- 북한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두고, 혁명 교양과 사회주의 교양에 중점을 둔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믿고 지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의 신념과 사회주의 애국주의, 계급 투쟁과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있음.
 - 북한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 원리는 사람들을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에 기초한 과학지식과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임.
-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도덕 교과목에서 정치사상 교양의 한 부분으로 경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소학교에서는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복수심을 자극하고, 타협하지 않고 싸워야 한다는 계급 교양 함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초급중학교에서는 노동의 중요성과 집단의 이익, 대가정체제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고급중학교 사회주의 도덕과 법 교과목에서는 생산·소비·분배, 경제도덕 등에 관한 경제생활과 직업과 명예, 신성한 노동 등을 교육하고 있음.
- 남한의 경제교육은 경제 지식과 사고력 및 가치관을 바탕으로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합리적이며 책임 있게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추구하고 있음.
 - 경제학의 기본 원리와 이론 체계를 이해하고, 사회 현상을 전체적 맥락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준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초등학교에서는 합리적 선택의 중요성, 지역 간 교류, 가계와 기업의 역할, 경제성장, 무역의 의미 등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

-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자산 관리와 신용의 중요성,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시장과 가격, 물가 변동과 실업, 국제 거래와 환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는 '시장경제와 지속 가능 발전' 단원에 자본주의의 특징, 금융 자산, 국제 분업과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 무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선택 과목인 고등학교 경제는 경제학과 경제 문제,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 경제 등 경제학의 내용을 교육하고 있음.

제4장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제1절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도출 과정

- 초안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선행연구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남·북한 경제교육 비교 등을 통해 5개 영역, 32개 핵심 개념과 보조 개념을 도출하여 작성함.
 -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 일상생활과 연계한 경제적 사고,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고려하여 구성함.
 - 학습 수준은 공통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맞추되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국 CEE가 제시한 20개 기본 경제 개념, 『맨큐의 경제학』에서 제시한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도 참고하였음.
 - 기본 개념 이해, 시장경제 이해, 국가 경제 이해, 개방 경제 이해, 금융 이해의 5개 영역과 영역별 핵심 개념, 보조 개념을 도출함.
- 수정안은 초안에 대한 경제 및 경제교육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6개 영역 21개 학습 개념으로 작성함.
 - 남북한 경제체제 이해 영역을 추가하고, 국가 경제와 개방 경제를 통합했으며, 현장 실습 및 상담 영역을 추가해 6개 영역으로 재편함.
 - 기본 개념 이해에서는 자원의 희소성,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 의사결정을 합리적 선택으로 통합하며 시장경제 이해에 대한 학습 개념을 9개에서 4개로 조정함.
 - 국가 경제 이해와 개방 경제 이해는 국가 경제 및 국제 경제 이해로 통합하고, 금융

- 이해는 금융 생활 이해로 수정하면서 체계적인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함.
- 신용회복제도, 부동산, 세금, 보험, 창업 등 경제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묶어 현장 실습 및 상담 영역을 추가함.

□ 최종안은 북한 및 경제교육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2차 의견조사를 진행 하고, 이를 반영하여 5개 영역 20개 학습 개념을 도출하여 작성함.

- 기초개념 이해 영역의 핵심 개념을 시장경제 이해 영역으로 통합하여 6개 영역을 5 개로 축소함.
- 국가 경제 및 국제 경제 이해 영역에서는 학습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통합하는 조 정이 이루어짐.
- 금융 생활 이해 영역에서는 일부 학습 개념을 재편성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용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보완함.
- 현장 실습 및 상담 영역의 보조 개념을 추가하여 학습 내용을 구체화함.

제2절 영역별 학습 개념

□ 최종안으로 선정된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의 영역과 학습 개념은 다음과 같음.

- 남북한 경제체제 이해 영역에는 한국 경제 발전사, 남북한 경제체제의 비교를 학습 개념으로 선정함.
- 시장경제 이해 영역에서는 합리적 선택, 시장, 경제 순환과 경제 주체의 역할, 시장 가격의 결정 원리, 시장의 효율성과 정부의 개입을 학습 개념으로 선정함.
- 국가 경제 및 국제 경제의 이해 영역에는 경제성장과 경기 변동, 물가와 인플레이션, 고용과 실업, 무역과 환율이 학습 개념으로 선정됨.
- 금융 생활 이해 영역에서는 수입과 지출, 자산 관리, 신용과 위험 관리, 금융 피해 방 지 및 대응책을 학습 개념으로 선정함.
- 현장 실습 및 상담은 신용회복제도, 부동산, 세금, 보험과 연금, 창업과 폐업 등 실생 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였음.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살아온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함.
 - 계획경제체제에서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해본 경험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은 기본적인 경제원리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자본주의 경제 운영 시스템과 함께 경제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 개방 경제 및 개인 금융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함.

-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핵심 개념과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경제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함.
 - 단기간에 많은 내용을 교육하려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이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며 시장경제체제를 익혀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제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람.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충분한 경제교육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되기를 바람.
 -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핵심 개념 학습을 토대로 양질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을 기대함.

제1장

서론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MIT 경제학과 교수),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제임스 A. 로빈슨(James A. Robinson,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은 국가의 경제적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정치·경제적 제도를 강조하였다. 2012년 발간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대런 아세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에서 실패한 국가들의 사례를 추적해 주요 정치·경제적 발전상을 설명하는 유용한 이론으로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s)와 ‘착취적 제도(extractive institutions)’를 제시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시로 남한과 북한을 들었다. 분단되기 이전 비슷한 수준이었던 남한과 북한의 경제 격차가 열 배 이상으로 벌어진 이유는 이들이 선택한 제도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한은 법치와 정치적 자유를 존중하는 포용적 제도를 선택하면서 다수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끈 반면, 북한은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착취적 제도로 다수의 기회를 억압해 국가의 장기적 번영을 저해했다고 분석했다.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크게 늘기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경제난과 남한의 경제 발전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경제난과 대기근으로 인해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계획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국가에 의한 배급제를 유지하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다. 이에 반해 남한 경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3저 호황에 힘입어 1994년 9.2%, 1995년 9.6%의 경제성장률로 고도성장을 이룩했으며, 1996년에는 선진국 간 협력 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치열

한 경쟁, 남한 사회의 차별과 편견 등 체제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남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착 지원금, 직업 훈련 장려금, 취업 장려금, 고용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취업 및 창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이 남한과 북한의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도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직업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를 위한 사회적 역할 분담의 성격을 가지며, 일을 통해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을 의무로 인식한다. 이는 노동을 생산의 주요 요소이며,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소득을 얻는 경제적 행위이자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보는 시장경제 관점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개인의 노력과 경쟁의 중요성, 소득의 차이는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큰 정부를 강조하는 등 시장경제에 대해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 이는 자유와 경쟁, 사유 재산 등 시장경제체제의 대표적인 특징을 북한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박기량(2004)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경험하고 경쟁이나 능력주의 등 시장경제 체제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취업활동과 남한에서의 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재분배나 일자리 및 공공 서비스 제공 등 국가의 재분배 역할을 선호하기보다 개인의 자율성이나 책임, 경쟁을 선호할 경우 더 높은 소득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북한의 보통 교육과정에서 시장경제 관련 교육이 없고, 북한에서 건전한 금융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것도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북한주민의 실질 소득은 미래를 준비하도록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북한의 은행은 저축이나 재산 관리 등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저축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 생활에 대한 경험 부족은 남한 생활에서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금융 관련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이를 불법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경제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도착한 직후 하나원에서 받는 400시간의 교육 중 경제교

육은 약간의 시장경제 이해와 개인 금융 관련 교육에 그치고 있으며, 정착 후 하나센터에서 받는 경제교육도 실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금융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생을 계획경제체제에서 생활해 온 이들에게 필요한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나, 남북한 경제체제 차이에 대해 교육하는 곳은 KDI 등 극히 일부 기관에 그치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경제 개념 및 내용 요소를 도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적합한 경제교육 교재나 자료 제작의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관련 자료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현황 및 경제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교육 내용을 분석했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의 적합성 검토와 심의 과정을 통해 학습 개념 및 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 이해를 돕기 위한 경제교육 핵심 개념을 선정했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조사와 교육 관계자 의견 조사를 통해 수집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실태와 이들의 시장경제 이해 정도 및 적응 실태를 정리했다. 제3장에서는 북한 체제의 특성과 시장화에 따른 변화, 남북한의 학교 경제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는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의 도출 과정과 경제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5개 영역별 학습 개념 및 내용 요소를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는 결론과 제언을 담았다.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의 상이한 정치·경제적 체제와 문화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적응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다. 본 연구는 이들이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맞춤형 경제교육 핵심 개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향후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제2장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한국 사회 적응 실태

본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해 어떻게 적응하며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관련 통계자료와 보고서 및 선행연구를 조사했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및 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과 집단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조사를 실시했다. 면담과 FGI는 총 6회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적응 현황과 현재 제공하고 있는 경제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파악했다. 면담과 FGI의 일시 및 참여자는 <표 2-1>과 같다.

<표 2-1> 개별 면담과 FGI 일시 및 참여자

회차	일시	형식	참여자
1	2024. 5. 23.	개별 면담	남북하나재단 담당자 1명
2	2024. 5. 28.	개별 면담	북한이탈주민 단체 운영자 2명(북한이탈주민)
3	2024. 7. 30.	개별 면담	북한이탈주민 단체 운영자 1명(북한이탈주민)
4	2024. 8. 7.	개별 면담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강사 1명
5	2024. 8. 20.	FGI	서울·경기지역 하나센터 담당자 5명
6	2024. 8. 22.	FGI	공공기관 교육 담당자 3명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현황과 지원 실태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현황

가.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관련 통계

북한이탈주민은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제2조 1항). 한국에 망명해 온 북한이탈주민은 8.15 광복 이후부터 꾸준히 존재해 왔으나, 탈북의 이유와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시대에 따라 변천을 겪었다. 초기에는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와 같은 정치적 이유에 의한 탈북이 주를 이루었고, 이들을 ‘귀순자(歸順者)’ 혹은 ‘귀순용사(歸順勇士)’로 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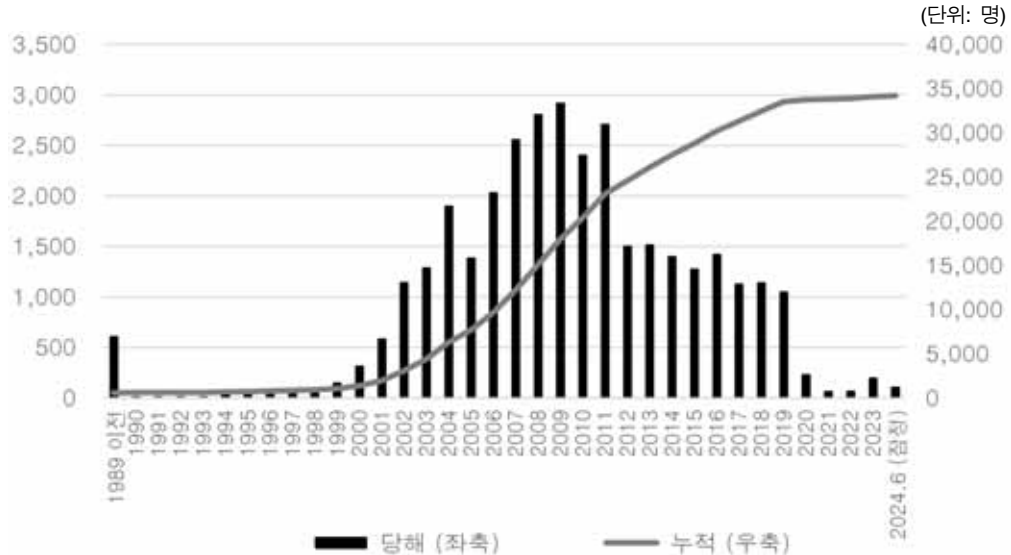
1970년대 후반부터 고도의 경제성장을 실현해 온 한국과 달리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이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탈북의 동기도 경제적 이유로 바뀌었다. 특히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고 극심한 식량난이 발생하면서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생존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난민으로서 한국에 입국하였다.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들의 보호와 정착 및 사회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도 바뀌어 ‘북한이탈주민’이 법률 용어로서 명시되었으며, 이와 함께 ‘탈북민’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였다. 2005년에는 정부가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한 용어인 ‘새터민’이 사용되기도 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요청 등으로 사용이 중단되고 ‘북한이탈주민’이 공식 용어로 쓰이게 되었다.¹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북한 내 식량난이 발생한 1994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 해 10명 내외였던 입국 규모는 1994년에는 52명, 1999년에는 148명까지 증가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가족을 동반한 집단 탈북과 이미 탈북한 연고

¹ 최근에는 ‘북배경주민’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제안되기도 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024년 2월 21일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북배경주민’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그림 2-1] 북한이탈주민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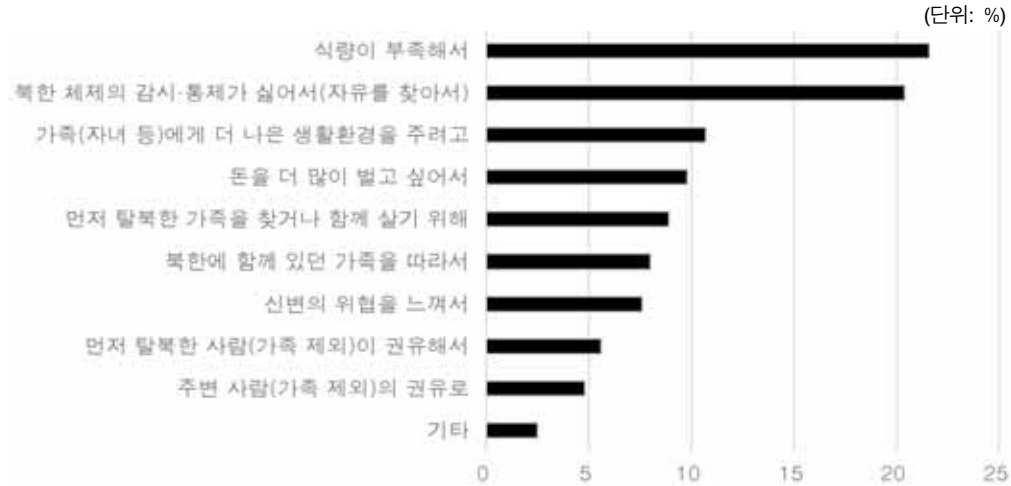
자료: 통일부, 『통일백서』, 각년도.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입국하는 사례가 늘면서 증가세를 보였다. 2003~2011년에는 연간 입국 인원이 2,000명대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김정은 정권 출현 이후 접경 지역의 통제 강화와 같은 탈북 여건의 악화로 입국 인원이 감소하며 1,500명대 이하로 유지되었다. 2020~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하였던 입국자 수는 2023년부터 차츰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4년 6월 말 기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34,18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그림 2-1 참조).

남북하나재단의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 먼저 [그림 2-2]와 같이 주된 탈북 동기로 ‘식량이 부족해서’와 ‘북한 체제의 감시·통제가 싫어서(자유를 찾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1.6%, 20.4%로 나타났다. 민생의 해결과 정치적 목적이 주요 탈북 동기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가족(자녀 등)에게 더 나은 환경을 주려고’(10.7%),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9.8%) 등으로 조사되었다.

2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는 매년 1997년 1월 1일부터 조사 시점의 전년도까지 국내에 입국한 만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된다. 2011년에 시작된 이 조사는 주거 실태, 생활과 정책 지원에 대한 만족도, 가족 및 경제활동 상황, 교육 상태 등을 조사하다가, 2017년부터는 생활 안정, 입국 전 사항, 직업 교육 훈련, 일·구직·이전 직장(일)에 관한 사항, 가구 경제 상태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그림 2-2]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



자료: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202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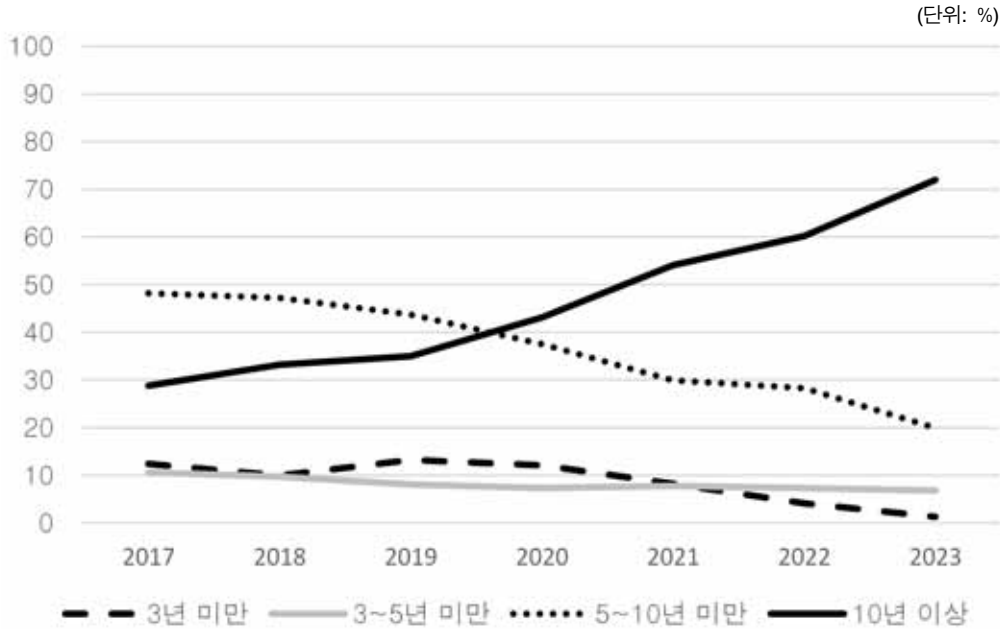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가 2000년대 중반부터 2011년까지 집중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남한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의 비중은 2017년 28.8%에서 2023년 현재 72.0%로 상승하였다. 반면, 2017년 48.2%를 차지하던 5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민의 비중은 2023년 19.9%로 급락하였고, 3년 이상 5년 미만 및 3년 미만 거주민의 비중도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그림 2-3 참조).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성별은 남성 24.7%, 여성 75.3%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연령대로는 40대(27%)와 50대(26%)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50대와 60대 이상의 비중이 늘어난 반면, 다른 연령대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특히 50대의 비중은 2017년 13.8%에서 2023년 26.0%로 늘었고, 20대의 비중은 같은 기간 17.9%에서 9.1%로 줄었다(그림 2-4 참조).

2019~2023년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에서 직업을 가졌던 이들의 비율은 60% 내외이며, 이 중 노동자가 30%대 초반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약 40%는 북한에서 직업이 없었는데, 이 중 절반 정도는 학생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장사, 주부가 주를 이룬다.³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전체의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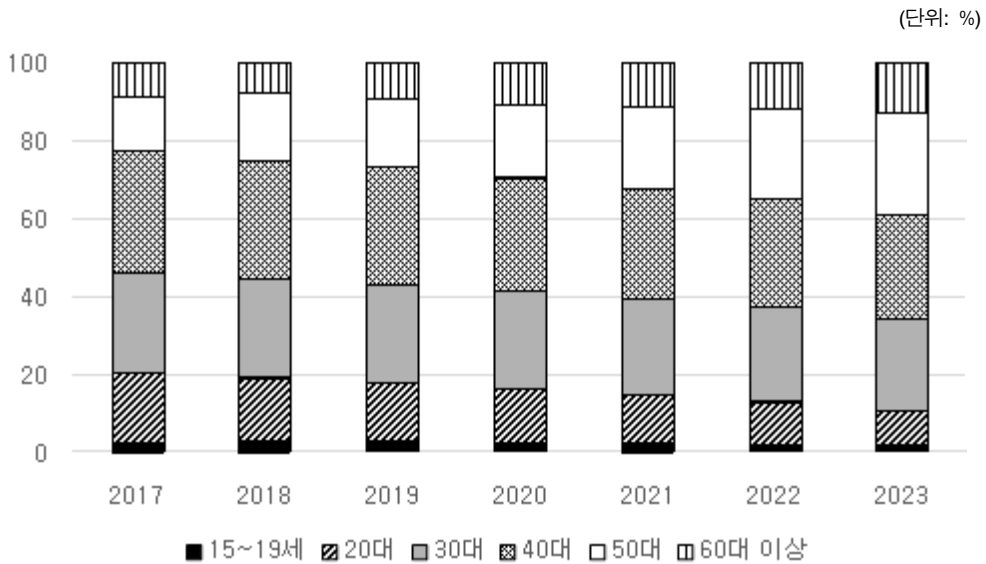
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서 직업은 당이 배치한 직장에서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사’는 ‘직업 없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림 2-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거주 기간별 비중



자료: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각년도.

[그림 2-4]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별 비중



자료: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각년도.

65%를 차지한다. 이 중 절반가량은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으며, 주로 식당 종업원 및 가사 도우미 등 서비스직과 생산직, 기술직, 별목업 및 건축업, 농업 및 축산 관련 직업의 경험이 있었다.

나.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현황⁴

2023년 남북하나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33.8%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원에서 초기 정착 교육을 이수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 지역에서 실제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정착 실태를 살펴보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여성이 74.7%, 남성이 25.1%로 여성의 비중이 높는데, 이는 전국 비율(여성 75.3%, 남성 24.7%)과 비슷하다. 이들의 남북 통합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62.7%, ‘전문대학 졸업 이하’가 18.3%, ‘대학교 졸업 이상’이 13.9%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2.0%, 30대가 29.4%, 50세 이상이 17.6%로 나타났는데,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30~40대의 비중이 크고, 50세 이상은 작은 편이다.

이들의 남한 거주 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의 비중이 46.5%로 가장 높는데, 이는 같은 기간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전국 평균인 19.9%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편이다.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국가 소유’가 82.0%, ‘타인 소유’가 10.8%, ‘본인 소유’가 6.1%였으며, ‘정착 후 이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1.3%로 일반 국민(63.3%)이나 전국 북한이탈주민(62.1%)의 비율과 비슷했다. 이들의 주된 일자리 유형은 제조업(32.6%), 숙박 및 음식점업(15.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7.7%) 등이었으며, 월평균 임금은 16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남한 생활에 만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은 64.0%였으며, 3.5%만이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족하는 이유는 ‘북한 생활보다 여유가 생겨서’(45.8%),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41.5%), ‘내가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41.5%),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아서’(28.7%) 등이었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57.0%), ‘남한 사회 문화 적응이 어려워서’(30.3%), ‘각종 편견과 차별

4 2020년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한 정책연구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생활문화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때문에’(27.2%), ‘본인의 능력과 하고 싶은 일 사이의 격차가 심해서’(21.2%) 등을 꼽았다. 또한 이들이 정부나 사회로부터 원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39.8%)이 가장 높았으며, ‘의료 지원’(39.3%), ‘교육 지원’(36.4%)도 비슷한 비중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현황⁵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두 번째로 많이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현황을 살펴본다.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6,473명으로, 이는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약 20%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28.7%)와 20대(28.3%)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 17.8%, 10대 11.2%, 50대 6.1%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이 4,445명(68.7%)으로 남성(2,028명, 31.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양천구(15.5%), 노원구(15.4%), 강서구(13.6%)였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2020년 7,085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차츰 감소하고 있다. 1인 가구의 비중은 35.2%로 일반 서울시민(34.9%)과 비슷하고 전국 평균(31.7%)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은 67.2%에 달했으며,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비중은 6.9%에 불과했다. 전국 북한이탈주민의 응답 결과와 비교하면 임대 주택 거주 비율은 9.3%p 높고, 자가 소유 비율은 11.3%p 낮았다.

2021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53.4%로 일반 서울시민(59.2%)보다 낮고, 실업률은 8.8%로 서울시민(4.8%)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자 중 39.5%는 비정규직이며,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45.7%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직장은 민간 기업 또는 개인 사업체(54.9%)가 가장 많았으며, 법인 등 민간 단체(12.6%), 정부 투자 기관과 공기업(12.0%)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에서 주로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 남성은 단순 노무(23.3%), 여성은 서비스직(35.6%)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취업 경로는 지인을 통한 경우가 20.6%로 가장 많았고, 대중 매체(17.7%)나 민간 취업 알선 기관(14.9%),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13.1%), 고용노동부 고용센터(9.1%) 등으로 나타났다. 2022년 3월 기준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1,907명(26.9%), 의료급

5 2023년 9월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한 정책리포트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선 방향』과 서울연구원 사이트의 서울인포그래픽스+ 중 「349. 서울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모습은?」(2023. 12. 18), 「350. 서울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은?」(2023. 12. 26)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여 수급자는 2,745명(38.7%)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일반 시민이나 전국 북한이탈주민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스스로도 남한에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하층 또는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았다.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하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34%,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38.8%, 최하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12.5%였다. 상층(1.6%)과 최상층(0.8%)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정서적·심리적 취약성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2017~2021년 5년 평균 자살 충동 경험은 13.8%로 전국 북한이탈주민(13.4%), 대한민국 국민 전체 평균(5.2%, 2020년 기준)보다 높았다. 특히 자살 충동 경험의 주요 원인이 신체적·정신적 질환과 장애(31.3%), 경제적 어려움(28.2%), 외로움과 고독(16.5%)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적응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 실태

가. 중앙정부 및 유관 기관

1) 통일부⁶

1960년대에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격 규정과 함께 변화해 왔다. 1962년에 제정 및 시행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에서는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 대상으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을 시행했다. 1979년에는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이 시행되면서 귀순자를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칭하며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이 이루어졌다. 1993년에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로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 능력이 결여된 생활 보호 대상으로 전환하고, 정착금을 하향 조정하는 등 지원 규모를 축소하였다.

이후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귀순의 개념을 북한이탈로 대체하고, 이들의 자립과 자활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6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정착지원제도’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System/>).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체계화했다. 이를 통해 정착금 지급 및 주거 지원 뿐 아니라 취업, 사회 보장, 교육 부문의 지원 정책이 수립되었다. 구체적으로 취업 보호의 강화(2007년) 및 공공기관 취업 지원 강화(2010년), 직업 훈련 시행(2009년), 창업 지원(2021년), 지역적응센터 지정을 통한 거주지 적응 교육 및 진로 상담·생활 정보 제공·취업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 안내(2010년), 자산 형성 지원(2014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 확대(2016년),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초·중등 학교 설립 지원(2010년), 전문 상담사 제도(2010년) 등이 추진되었다.

특히 2014년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보호 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보호 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 보호 대상자의 직업 훈련, 고용 촉진 및 고용 유지, 의료 지원 및 생활 보호 등이 포함되었다. 2017년부터는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의 평가를 의무화하여, 추진 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최근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는 크게 초기 정착금, 주거, 취업, 사회 보장, 교육, 상담, 보호 담당관 지원으로 분류된다. 초기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 초기에 기초적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착금은 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 기본금, 장려금, 그리고 가산금으로 나뉜다. 정착 기본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1,000만원에서 4,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방 지원금은 지방 거주 시 주거 지원금의 10%(인천 제외 광역시) 또는 20%(기타 지역)를 지급한다. 이때 주거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1,600만원에서 2,300만원까지 지급되는데, 임대 보증금으로 지급되고 잔여금은 거주지 보호 기간인 5년이 지난 후 지급된다. 가산금은 고령, 장애, 장기 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 보호, 제3국 출생 자녀의 양육 시 최대 1,540만원까지 지급한다. 주거 지원 제도에는 주거 지원금 외에 주택 알선 제도를 두어,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 주택을 알선해 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사업도 실시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에게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취업 장려금은 거주지 보호 기간 5년 중 1년 이상 동일 업체 근무 시 최대 3년까지, 최대 1,800만원(수도권) 또는 2,100만원(지방)을 지급한다. 보호 기간 내 취업 장려금을 받지 못했거나 2년 미만으로 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회당 200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는 새출발 장려금

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사업장 알선 등 취업 사업 실시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한다. 고용 지원금 제도는 201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시행되었으며,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자산 형성을 위한 ‘미래행복통장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2008년부터 고용노동부, 직업 훈련 기관, 기업체의 협력하에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직업 훈련-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70여 개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취업 상담 공무원을 북한이탈주민 취업 보호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진로 지도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 기관을 알선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 보장 지원의 일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특례를 적용하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생계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한 뒤 6개월까지는 조건 없이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해 진찰과 치료를 비롯한 의료 혜택을 부여한다. 국민연금 또한 특례를 적용하여,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 대상자는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부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하는 한편, 학비를 지원하고 청소년이 다닐 수 있는 대안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만 24세 이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학업 운영 지원비 등을 면제받는다. 만 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 국공립대학은 학비를 면제받고 사립대학은 50% 보조를 받는다. 단,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및 그 외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 교육 시설은 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 학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 및 일반학교 편입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 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통일부 인가 민간 대안학교의 운영도 지원한다.

한편, 앞서 서술한 취업 보호 담당관과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지원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거주지 보호 담당관과 신변 보호 담당관이 활동하고 있다. 거주지 보호

담당관은 거주지 보호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주거 알선 및 임대 주택 특약 제도 운영,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및 의료급여와 긴급 의료 지원,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북한이탈주민 생활 실태 조사 및 거주지 보호 대장 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전국 약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지 보호 담당관이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신변 보호 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하여 전국에 약 840명의 경찰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신변 위해보부터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담당한다.

2) 남북하나재단⁷⁾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10년 설립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초기 정착 지원, 생활 보호, 취업 및 교육 지원, 통일 미래 리더 양성,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초기 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 교육·인재 양성 지원 사업, 자립·자활·취업 지원 사업으로 분류된다. 초기 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은 지역 전입 초기부터 정착 과정에 필요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있다. 전입 초기에 필요한 식료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을 지급하고, 의료비 지원과 외부 의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긴급 생계비 및 사망 위로금 지원과 함께 제3국 출생 자녀의 양육·장애·장기 치료에 가산금을 지급하고, 임대 주택 미배정 등으로 거주할 곳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공동 시설을 제공하여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교육·인재 양성 사업으로는 교육비 지원 및 장학금 지급, 진로 진학 지도, 학습지 지원 등이 시행된다.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하며, 별도의 장학 사업으로 대학(원)생, 중·고등학생, 검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선발한다. 또한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진학 지원단 또는 진로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제공한다. 만 3세~초등학생의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한글 등 희망하는 과목의 학습지 교사 방문 교육을 지원하고, 만 9~24세의

7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주요사업'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https://www.koreahana.or.kr/>).

북한이탈 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원어민 강사와 1:1 수준별 화상 영어 수업을 지원한다. 이밖에 북한이탈 학생의 학교 적응력 도모를 위해 학교 측의 신청 시 북한 교사 출신 통일전담교육사를 학교에 배치하여 학습 지도, 학부모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립·자활 지원 사업에는 단기 연수 지원, 일자리 성공 패키지 지원, 창업 지원, 영농 정착 지원, 통일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및 지원이 있다. 단기 연수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사가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 연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취업 현장 연수를 통해 기술 습득 및 직업 적응과 직업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기업주에게는 예비 고용 후 검증된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상담 및 진단(일자리 종합 상담 및 일자리 안내 자료), 일자리 준비(언어·스피치 교육, 취업 클리닉 프로그램), 일자리 탐색(멘토링 지원, 체험 및 실습 지원, 기업 채용 설명회 및 전문가 강연·코칭)을 제공해 맞춤형 구직 역량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연계를 지원한다. 창업 지원은 소규모 창업 지원을 위해 경영 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상담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세무, 대출 등 창업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창업 교육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있다.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는 한편, 창업을 위한 운영 자금 지원, 컨설팅 및 판로 확보 지원, 네트워크 구성 및 소통 확대, 귀농·귀촌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다. 통일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및 지원 사업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공모 및 현장실사와 심사·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2,000만원 내의 사업 개발비를 지원하고, 경영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한다.

취업 지원 사업은 진로 설계, 취업 준비, 취업 지원, 사후 관리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 내용은 취업 서비스와 직업 역량 강화 서비스로 분류된다. 취업 서비스로는 구인·구직 등록, 면접 코칭 클리닉, 취업 알선, 동행 면접 등을 제공한다. 직업 역량 강화 서비스는 취업 바우처 지원으로 국가 기술 자격, 국가 전문 자격, 공무원 고시 및 외국어 자격, 사무 자동화 컴퓨터 관련 자격 등의 취득을 지원하거나 취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표 2-2> 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2022년 기준)

구분	사업명
초기 정착· 생활 안정	의료 지원
	공공 의료 지원
	치과 치료
	난청인 의료
	외과수술·내시경 검사
	화상 환자 의료비
	비보호자 긴급 생계비
	긴급 생계비 지원
	무연고 장제비 및 납골 안치 지원
	사망 위로금
	공동 생활 시설
	생활 안정 키트·가전 제품 지원
	가산금(제3국 출생 자녀 양육, 장애, 장기 치료)
	북한이탈주민 지원 변호인 제도
북한이탈주민 가정 심리 검사 및 치료비 지원	
교육 지원· 인재 양성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 영어 교육 지원
	북한이탈 학생 학습 멘토링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 진학 상담
	교육(대학교 등록금) 지원
자립·취업 ·창업	정착 지원 전문 관리사 자격 교육
	취업 연계 직업 훈련(회계 실무자, 요양 보호사, 피부 미용사, 버스 운전기사, 애견 미용사)
	정착 경험 사례 발표대회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2 남북하나재단 연간 사업안내』, 2022, p.1.

3)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는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과 자립 및 자활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기존 하나원에서만 진행하던 기본 교육 이외에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게 되었다. 2024년 현재 전국에 2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하나센터의 기본 사업은 크게 지역 전입 및 초기 생활 지원, 초기 집중 교육, 통합 안전 지원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지역 전입 및 초기 생활 지원은 하나원 교육을 수

료하고 최초로 거주지에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행정 등록 및 주거 마련 등 지역에서의 기초적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택 계약, 관할 주민센터에서의 주민 등록, 생계비 및 의료비 신청, 생활용품 구입, 대중교통 및 은행 이용 등 지역·생활에 대한 안내 등을 실시한다.

통합 안전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발굴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위기 통합 지원)하는 한편,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하는 포괄적 지원(통합 안전 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유관 기관과 민-관 위기 관리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기 관리 대상에 집중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교류 및 주민 통합, 인식 개선 활동을 수행한다.

통합 안전 서비스 지원은 사회 보장 지원, 법률, 교육·진학, 안전 교육, 가족 통합, 지역 통합의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 보장 지원 서비스는 의료, 생계, 주거 복지 관련하여 일반 복지 체계를 안내하고 전문 자원을 연계한다. 여기에는 진료 및 건강 검진 등의 의료 지원과 상담, 정보 제공이 포함된다. 이는 국공립 및 사립 병원, 공공의료 협력 병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법률 지원 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법률 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법률 문제 발생 시 해결을 지원하거나, 북한이탈주민들이 알아야 할 법률 상식 교육을 지원한다. 교육 진학 지원은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학습과 진학을 지원하고 장학금 및 교육 자원을 연계하고 교육 지원청, 초·중·고등학교 교사 등과 협력하여 집단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도 한다. 안전 교육 지원 서비스는 필수적인 안전 교육과 함께 양성평등과 인권, 범죄 및 자살 예방, 그리고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가족재단 등의 자원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족 통합 지원 서비스는 가족 치료 전문가 및 가족 센터 등과 협력하여 가족 상담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공하고, 지역 통합 지원 서비스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류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

기본 사업 외에 각 센터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그중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서울북부하나센터의 ‘하나안심콜’ 사업을 들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전화 문의와 응대 및 그 결과를 기록하여 집계하면서 수요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수요 대상이 직접 요청하는 서비스에 즉각적인 대응 지원이 가능해지고, 생계, 법률, 취업, 기타 사회 적응(제도, 정보, 자원 연계 요청 사항) 관련 자

원 확보 및 연계 의뢰가 활성화되어 생활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 정착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

1) 경기도

경기도는 2008년 말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 1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전담팀을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행정적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북한이탈주민 출신 공무원을 채용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을 경기도에 유치하고 지원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경기도청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설치된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 경기도 내 6개의 하나센터를 통해 취업·법률·의료·생활 고충·심리 상담 등 생활 밀착형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내의 국비 사업으로는 하나센터 6개소를 통한 지역 적응 지원과 도·시·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통한 지역 특성화 사업, 지역 적응 기반 강화 사업 등이 있다. 도비 사업으로는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취업 역량 강화와 지역 사회 통합 및 적응 지원이 있다. 취업 교육과 인턴십 지원, 인턴 발굴과 일자리 연계, 북한말 언어 교정, 취업 컨설팅,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 간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통·화합 지원과 일반 주민·학생·공직자 대상의 북한이탈주민 이해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부처와 경기도가 협력해 운영하는 정착 사업으로는 통일부·고용노동부 등과 협업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통일부·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 등과 함께하는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 등이 있다.

<표 2-3>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 과제와 관련 기관(2020년)

목표	정책 과제(7개 분야)	세부 과제	관련 기관
북한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구현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	11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자원통신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탈북 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10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경기도
	생활 밀착형 서비스 확대	3	통일부, 법무부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 정비	3	통일부, 인천시
	하나센터 기반 강화 및 지원 인력 역량 강화	4	통일부
	취약 탈북민 보호 체계 확충 및 생활 안정 지원	17	통일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림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안보지원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탈북민을 포용하는 우리 사회 환경 조성	5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자료: 조성택 외,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생활문화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2020, p.60.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2013년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를 7가지로 체계화했다.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접적 지원, ②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필요한 실태 조사, ③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④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 활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⑤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의 우선 구매·재정 지원·세금 감면 등 혜택 제공, ⑥ 북한이탈주민 업무 위임과 위탁하는 자치구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 사업비 지원·지도·감독, ⑦ 북한이탈주민 지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포상이다.

2013년 조례 제정과 함께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의 핵심은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주민센터, 보건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였다. 종합 계획을 토대로 서울시는 기초 생활 물품 지원, 치과 및 심리 치료 등 의료 지원, 취업과 교육 지원, 어린이 집 우선 입소 자격 부여, 북한이탈주민 용어 개선 건의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2022년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 계획’을 발표하며 ‘생활 밀착 정착 서비스 지원 확대, 교육 격차 해소 및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일자리 확대로 힘이 되는 자립·자활 지원, 화합하고 포용하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반 및 협력체계 강화’의 5개 분야로 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3년 3월에 4대 분야 15개 사업으로 재편했다.

[그림 2-5]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 계획(2023년)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 『서울형 마음하나 종합지원서비스』	
[4대 분야 15개 사업]	
- 북한이탈주민이 서울시민으로서 행복한 서울살이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단편적인 정착지원을 넘어 완전한 자립과 사회 통합 지원 - 초기 정착부터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제고 기여	
1. 생활 밀착 서비스 지원	① 북한이탈주민 신규 전입자 기초 생활 물품 지원 ② 서울시민 되기 길라잡이 행사 운영 ③ 종합 건강검진 패키지 지원(심리검사 포함) ④ 일반질환 치료비 및 예방 접종비 지원 ⑤ 무료 치과 진료 지원 ⑥ 북한이탈주민 서울 생활 안내서 제작·배포
2.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① 가정 자녀 학습 지원(만 3세~초등학생) ② 청소년 대상 학습 지원(서울런 연계) ③ 찾아가는 가정 돌봄 서비스 ④ 위기 상황 신속 대응 긴급 돌봄 지원 ⑤ 마음 돌봄 프로그램 운영
3. 자립·자활 지원	① 북한이탈주민 공공 일자리 지원 ② 북한이탈주민 코칭 양성 지원
4. 지원 기반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서울시 지역 적응 센터 운영 지원 ② SH·LH 연계한 북한이탈주민 주거 지원

자료: 문민철·송미경,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선 방향』, 2023, p.18.

3. 북한이탈주민 대상 적응 교육 현황

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교육 내용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에 입국한 직후 2~3개월에 걸쳐 국가정보원 보호 센터에서 신원 조회 작업을 거치고, 신원 조회에서 자유를 찾아 입국한 것이 입증되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로 입소한다.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본원과 강원도 화천에 분소를 두고 성인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여 교육한다. 교육 목표는 우리 사회의 이해 및 적응, 자유민주주의 및 역사 등 국가관 확립이며, 12주에 걸쳐 400시간의 사회 적응 교육을 편성·운영한다. 사회 적응 교육은 우리 사회 이해 증진, 진로 지도 및 직업 탐색, 초기 정착 지원, 성평등·법정 교육, 정서 안정 및 건강 증진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 성인반과 남성 성인반은 교육의 목표와 영역은 동일하나, 세부 과목에서 남녀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그림 2-6 참고).

[그림 2-6] 하나원의 사회 적응 교육



※ 자율참여형 보충 프로그램(372시간) : 언어, 운전, 컴퓨터, 공예교실, 부모교육 등

자료: 통일부, 『통일백서』, 2024, p.87.

경기도 안성의 본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 사회 이해 증진 교육은 152시간 진행되며 시장경제 적응, 사회 이해 교육, 정보화 및 언어 교육,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로 지도 및 직업 탐색 교육은 162시간으로 가장 많은 교육 시간이 할당되어 있으며, 직업 선호도 검사, 진로 지도, 직종 설명, 기초 직업 훈련, 취업 설계를 포함한다. 초기 정착 지원 교육은 정착 지원 제도, 신변 보호 담당관에 대해 안내하는 것으로 35시간이 배정되어 있고, 양성평등 관점 통합 교육은 여성 인권과 양성평등,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으로 19시간 동안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정서 안정 및 건강은 32시간 동안 마약 중독 예방 및 건강 관리법 등의 내용으로 운영된다(통일부, 2024).

하나원의 사회 적응 교육은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하나은행,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동 제작한 『북한이탈주민의 생애 설계 자료집』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이 자료집은 취업, 재무, 가족, 평생 교육, 진학의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경제활동과 관련된 분야는 취업과 재무이다. 취업 분야에는 자격 정보, 직업 훈련 안내, 구직 활동 정보, 취업 지원 정보, 취업 지원 기관 정보, 직업 소개를 담고 있다.

재무 분야는 재무 설계의 필요성, 지출 관리, 소득 관리(자산 형성 방법), 노후 준비를 내용으로 한다. 이 중 지출 관리에서는 지출 관리의 필요성과 내용, 소비 습관(합리적 소비와 비합리적 소비, 신용 구매, 지출 계좌 별도 활용, 신용 관리 방법), 보험, 대출 관리를 소개하고 있다. 소득 관리에서는 정부 지원 제도 및 미래행복통장, 종잣돈 만들기, 금융 상품 활용, 예금과 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자산 관리 원칙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노후 준비에서는 국민연금 및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교육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우체국, 경찰청, 민간 교육 기관이 하나원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생 교육 분야에서는 평생 교육과 평생 학습, 지역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 평생 교육 바우처,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를 소개한다. 진학 분야에서는 진학 결정, 학교 선택 및 대학 진학 등에 대해 다룬다.

나. 하나센터의 교육 내용

하나센터의 초기 집중 교육은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최초로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 사회 적응에 목적을 두고 있다. 거주지 보호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에 실시하며 교육 기간은 8일이다. 교육 시간은 1일 6시간 내외로 기본 교육 프로그램 30시간과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20시간으로 총 50시간을 편성하되, 각 프로그램 내 세부 시간은 각 하나센터의 재량으로 정한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업무매뉴얼’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초기 집중 교육의 ‘표준 교과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 교육 프로그램에는 가족, 건강, 취업, 재무, 학업 등 기본 욕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개인 상담 및 구체적인 생애주기에 따른 정착 계획 수립이 포함된다. 실생활 현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휴대폰 기능 이해 및 정보 활용 실습, 은행 금융 서비스 활용, 법률 교육(생활법률, 기본권, 노동권, 인권, 시장경제, 법적 구제 절차 등) 및 상담, 올바른 물품 구입 요령과 다단계 및 불법 피라미드 피해 사례와 각종 계약 시 주의 사항 등 소비자 교육, 퇴거 및 청약 저축 등 주택 관리와 정착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이 있다(남북하나재단, 2023c). 진로 탐색과 직업인으로서의 정착을 위해 취업 가능자 대상으로 취업 현황과 구인·구직 정보, 미래행복통장 제도 안내와 사례 공유, 모의 면접, 취업 현장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외에도 의사소통, 비폭력 대화, 양성평등, 부모 교육, 자기 이해, 스트레스 관리, 분노 조절 등에 대한 개별 및 집단 상담 진행을 편성안에서 제시하고 있다.

기본 프로그램과 연계해 실시하는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에는 인구·산업·사회 복지 등 지역 현황 교육, 교통카드 활용 교육 및 대중교통 현장 체험, 주거 및 이웃과의 생활 예절과 언어 교육, 관공서·교육 기관(직업 훈련/요양보호교육기관 등)·의료 기관(주 이용 병원, 감면 지원 병원 연계), 도서관 등 주요 기관 및 전통 시장, 대형 마

트 탐방과 이용 방법 교육 등이 포함된다. 다만, 표준 교과 편성안은 참고하되, 이론 중심이 아닌 실제 사례 및 현장 중심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개별 하나센터는 수요 조사 실시 또는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파악되는 요구나 문제 등을 반영하여 교육 주제를 선정한다. 하나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하나센터에서는 주로 상속, 금융 사기, 소송 대처법, 피싱 사기, 금융제도 안내와 같은 법률 분야 교육, 인권, 4대 폭력, 범죄 및 자살 예방과 같은 안전 분야 교육, 임대 아파트 관리, 청약 등의 주거 정보 교육, 공교육 시스템 이해, 독서 지도 등의 학교 적응 교육, 자녀 양육 코칭 교육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일부 교육은 5~10명 정도의 소규모 교육과 개별 상담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법률 교육과 자녀 양육 코칭이 대표적으로, 실제 북한이탈주민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교육 담당자는 평가했다. 교육 이후 1:1 밀착형 조언을 받는 상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법률 분야 교육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담 변호사 상담 제도와 연계해 의뢰 빈도가 높은 분야를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니즈를 반영했다. 자녀 양육 코칭도 부모-자녀 소통 교육을 소규모로 운영한 후 가정 방문을 통한 맞춤형 양육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영상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이루어진다. 온라인 교육은 각 센터 및 교육 주제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연 4회 이내, 1회 2시간씩 실시되고 있다. 하나센터 교육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에 대해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낮지만, 다수에게 교육 주제와 접촉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나센터에서 실시하는 경제교육 역시 하나원과 마찬가지로 생계 지원 상담을 통해 파악되는 문제 및 수요가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는데, 주로 금융교육 및 상담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은행 이용, 예·적금 및 금리, 보험, 적금, 청약, 금융 상품, 대출 등 금융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에서부터 금융 사기, 채무 해결, 금융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금융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고 잘못된 소비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채무 해결 및 개인 회생에 대한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외부 기관과 연계해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센터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교육이 금융 사기 등 사고의 발생 후 수습을 도와주는 사후적 구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된 법률 교육 및 상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교육에 대한 수요는 낮은 편으로 보인다. 하나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요청하는 교육 내용은 자녀의 한국어 교육, 자녀 양육 방법, 이중 국적 문제와 같은 자녀 교육 관련 부문이나 주거 정보, 사기 대응 등이다. 당장의 수입과 소비 지출에 관심을 가질 뿐 장기적인 재무 설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경제에 대한 주된 관심이 몰가나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교육은 북한이탈주민뿐 아니라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 및 연계하는 하나센터 직원들에게도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조사된다.

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 현황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나와 지역 사회에 정착하게 되면 지역 하나센터에 소속되어 교육 및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하나센터 담당자들과의 FGI에 따르면 하나원과 마찬가지로 금융교육을 제외한 경제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공공 및 민간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운영을 계획하는 기관이 있으나, 생업을 뒤로 하기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교재를 제작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KDI와 금융감독원은 자료 조사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는 자료 조사와 FGI를 통해 관련 교육 정보를 수집했다.

1)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KDI는 2018년부터 KB금융공익재단·미래한반도여성협회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KDI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기관의 교육과 다른 점은 비교적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는 점과,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나 한국 경제 발전사 같은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교육은 주말을 이용해 12주 과정(총 50시간 내외) 동안 집합 교육으로 진행된다. 또한 예금보험공사, 한국소비자원, KB금융공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조폐공사 등 관련 기관의 강사가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2024년에 KDI가 진행한 교육의 주요 내용은 <표 2-4>와 같다.

<표 2-4> KDI의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프로그램 주요 내용(2024년 기준)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강사 및 참여 기관
남과 북의 경제 용어 차이 / 남과 북의 경제 협력	3.5	미래한반도여성협회
알아 두면 유용한 생활 금융 지식	2	예금보험공사
현명한 소비 습관 / 소비자 문제와 해결 방법	2.5	한국소비자원
은행 이용 및 금융 상품의 합리적 선택	2	KB금융공익재단
신용등급과 채무자 구제제도	2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이해 / 금융 사기 예방 및 구제법	2	서민금융진흥원
화폐의 숨은 이야기	2	한국조폐공사
세금의 이해	2	국립조세박물관
한국경제발전전시관 관람	1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알기 쉬운 한국 경제 발전사	2	KDI
핸드북으로 알아보는 시장경제 / 금융 사기 체험 활동	3.5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 생활 경제의 이해	4	전문가 강의
한국 금융 생활 이해하기	2	
부동산 사기 유형 및 예방법	4	
금융 투자의 원칙과 유의 사항	2	
생애주기별 재무 설계	4	

2020년에는 한국소비자원,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용 경제교육 자료를 발간했다. 한국소비자원과는 『현명한 소비, 행복한 미래』를, 서민금융진흥원과는 『내 돈을 지키는 사기피해 예방법』을 제작했다. 『현명한 소비, 행복한 미래』에는 소비 생활의 중요성,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광고, 구매와 지불 방법, 소비자 문제와 해결

[그림 2-7] KDI · 한국소비자원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간한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자료 표지



<표 2-5> 『현명한 소비, 행복한 미래』 목차

생각해 보기	나의 소비 성향 및 소비 지식을 진단해 보자
소비자와 경제	소비 생활이 왜 중요할까요
	소비자와 생활 경제, 함께 생각해 봐요
	소비자는 어떤 권리와 책임이 있을까요
표시와 광고	소비자 정보는 왜 필요할까요
	광고 함께 알아볼까요
	상품표시는 무엇일까요
구매와 지불 방법	구매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지불해야 할까요
소비자 문제와 해결 방법	소비자 피해 이럴 때 이렇게 해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일을 합니다
	소비자 피해를 입었을 땐 이렇게 신청해요
	분쟁조정위원회는 무엇일까요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소비자원, 『현명한 소비, 행복한 미래』, 2020, p.5.

<표 2-6> 『내 돈을 지키는 사기피해 예방법』 목차

I 저축이란 무엇이고, 부채란 또 무엇일까?	
1. 저축이란 무엇일까?	1) 목돈 마련을 위해 저축하기
	2) 보험, 잘 고르고 활용하는 법
	3) 금융 투자 상품이란 무엇일까?
	(금융 더하기)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면?
2. 부채란 또 무엇일까?	1) 어떻게 부채를 관리해야 할까?
	2) 신용 카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II 금융 사기는 무엇이고, 그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금융 사기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금융 사기란 무엇일까?
	2) 다양한 금융 사기 유형
	2-1 보이스피싱
	2-2 스미싱(전화 사기)
	2-3 메신저피싱(문자 금융 사기)
	2-4 파밍, 메모리 해킹
	2-5 유사 수신 사기(다단계)
	2-6 불법사금융
	2-7 대출 사기
2-8 대포통장 사기	
2. 금융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 금융 사기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 서민금융진흥원, 『내 돈을 지키는 사기피해 예방법』, 2020, p.7.

방법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내 돈을 지키는 사기피해 예방법』에는 저축과 부채의 의미, 금융 사기의 유형과 예방 및 대처법 등이 담겨 있다.

KDI는 한국소비자원·서민금융진흥원과 단위별로 1~2편의 영상 자료를 제작해 해당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한국 경제 발전사』를 제작·발간하였다. 『알기 쉬운 한국 경제 발전사』, 『현명한 소비, 행복한 미래』, 『내 돈을 지키는 사기피해 예방법』은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하나센터에 배포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015년 통일부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정착 전 하나원에서 진행되는 교육 중 은행 이용 방법, 금융 상품의 종류, 금융 사기 예방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대상 금융교육 교재 『똥똥이와 삼녀의 금융생활 정착기』를 발간했다. 교재의 주요 내용은 은행 이용, 저축과 합리적 소비, 보험 이용, 부채와 대출, 신용 카드 이용, 금융 투자 상품 이해, 주택 관련 금융 상품 등이다.

2018년에는 교재 내용을 애니메이션과 강의 형태의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똥똥이와 삼녀의 금융생활 정착기』에 실린 내용은 <표 2-7>과 같다. 2024년 4월에는 2015년 제작하여 하나원에서 교재로 사용 중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금융생활 길잡이』를 수정·보완하여 제3판을 발간했다.

<표 2-7> 『똥똥이와 삼녀의 금융생활 정착기』 목차

1. 은행 이용	① 통장 개설은 어떻게 할까?
	② 은행 거래는 어떻게 할까?
	③ 은행 거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 저축과 합리적 소비	① 합리적인 저축이란 무엇일까?
	② 합리적인 소비란 무엇일까?
3. 보험 이용	① 보험이란 무엇일까?
	② 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③ 민영 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에 따라야 할까?
	④ 내 보험료 얼마가 적당할까?
4. 부채와 대출	① 부채란 무엇일까?
	② 부채는 왜 발생할까?
	③ 부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④ 대출 받을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5. 신용 카드 이용	① 신용 카드는 무엇일까?
	② 신용 카드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까?
	③ 신용 카드는 어떻게 발급할까?
	④ 카드 분실이나 도난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쉬어가기) 신용이란?
6. 금융 투자 상품 이해	① 금융 투자 상품이란 무엇일까?
	② 금융 투자 상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③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④ 금융 투자 상품 투자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일까?
7. 주택 관련 금융 상품 이용	① 입국 초기 탈북민들이 사는 집은 어디일까?
	② 임대 아파트 보증금 전환은 어떻게 할까?
	③ 전세와 장기 전세는 어떻게 다를까?
	④ 주택 청약이란 무엇일까?
	(쉬어가기) 알아 두면 유익한 금융 상식
8. 금융 사기 예방법	① 금융 사기란 무엇일까?
	② 금융 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③ 금융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④ 유사 수신이란 무엇일까?
	(쉬어가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이용하기

자료: 금융감독원, 『똥똥이와 삼녀의 금융생활 정착기』, 2015, pp.4-5.

<표 2-8>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금융생활 길잡이』 목차 및 주요 내용

목차	주요 내용
1. 은행 이용	통장 개설, 은행 거래 방법 등
2. 저축과 합리적 소비	예·적금의 개념과 특성 소개 등
3. 보험 이용	보험의 종류 및 보험 가입 절차 등
4. 부채와 대출	부채 관리 방법 및 대출 시 검토 사항 등
5. 신용 카드 이용	신용 카드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등
6. 금융 투자 상품 이해	금융 투자 상품의 종류 및 유의 사항 등
7. 주택 관련 금융 상품 이용	주거 형태 종류 및 주택 청약 신청 방법 등
8. 금융 사기 예방법	금융 사기의 종류와 대처 방법 등

자료: 금융감독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금융생활 길잡이』, 2024, pp.4-5.

3)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북한이탈주민이 시장경제에 잘 적응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필수 경제·금융 용어 이해, 신중한 소비 습관과 신용 카드 및 신용 관리, 생애주기별 재무 설계, 돈 모으기와 돈 빌리기 등 은행 사용법, 금융 사기 예방’의 5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교육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와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 대상 교재를 이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주로 경기도 하나센터에 신규 배정된 북한이탈주민으로, 20~70대의 여성이 많으며, 이 중에는 중국 체류 경험자도 다수 있다. 교육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거나, 하나센터가 교육을 요청하면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교육 현장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재테크나 금융 사기 방지, 은행 이용 방법 등이다. 강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 강사를 파견하며, 강의 시에는 PPT 자료와 관련 영상을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보드게임이나 현금 출납기 모형 등 실습을 진행하기도 한다.

4)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의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한국 금융 기관 및 금융권에 대한 이해, 기초적인 신용 지식, 채무조정제도, 금융복지제도 등이 있다. 특히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해 대응 시기를 놓치는 북한이탈주민이 많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단일 은행 제도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한국의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 고금리 대출이나 제도 밖의 대출도 거리낌 없이 이용하는 등 비합리적인 금융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신용 관리 능력을 갖추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 나가고, 채무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해 경제적인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5)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에 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 사기 예방 교육, 금융 정보 교육, 강사 대상 교육 등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재로 자산 형성, 금융 사기 예방 등 주제별로 표준 교안을 발간했으며, 북한인권정보센터와 남북하나재단, 금융감독원, 대한사회복지회 등의 자문을 받아 교육 영상을 개발했다.

2017년부터 KDI나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등에서 요청을 받아 강사를 파견하여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사진은 약 50명이다. 교육은 보통 강의식으로 진행되며, 기초 교육 대상자들이거나 교육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청소년용 워크북을 활용한 활동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종료 후 QR코드를 활용해 추가적인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에는 KDI와 공동으로 기초 금융교육 교재 『내 돈을 지키는 사기피해 예방법』을, 2022년에는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 기초 금융 역량 향상 및 금융 사기 예방 영상을 제작했다. 온라인 교육을 위해서는 영상 자료 6편을 제작해 기관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남북하나재단의 미래행복통장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온라인 교육과정(25차시, 168분)을 운영하고 있다. 미래행복통장 가입자는 북한이탈주민 중 약 35% 내외로 추산되며,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4,447명이 이 과정을 이수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행복더하기 사업’ 지원 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도 7차시 총 91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2절 북한이탈주민 시장경제 이해 및 적응 실태

1.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 이해 실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교육에 있어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개인에게 손실이며, 이것이 나아가서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경제교육은 논리적이고 사려 깊게 사고하는 훈련을 통하여 경제 주체들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제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의사결정 능력은 학습을 통해 신장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경제교육의 중요성은 크다.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과거로 인해 일반 국민보다 경제 관련 지식이나 올바른 경제생활을 위한 태도를 습득할 기회가 부족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한 사람은 비록 자본주의 사회에 거주하더라도 여전히 경제 지식이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Jappelli, 2010),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지식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및 금융 이해력을 일반 성인과 비교한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이해력 수준을 점검하고,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경제교육 분야 및 내용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교육은 경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론적인 기초를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은 경제교육을 통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경제 문제를 접했을 때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며, 더 나은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경제교육 내용 요소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경제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 이해력을 측정하는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을 조사 대상으로 한 경제 이해력 조사로는 ‘2016년 전 국민 경제 이해력 조사(KB금융공익재단)’와 ‘2015년 금융 이해력 조사(금융감독원)’가 있다. 이 두 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정착 및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제교육 분야 및 내용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 이해력 조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높은 경제 이

해력이 중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으며, 경제 이해력 제고를 위한 경제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경제 이해력 취약층 파악 및 대응 방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동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2016년에 실시한 경제 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이해력은 일반 성인보다 16점 낮게 나타났으며, 2015년에 실시한 금융 이해력 조사에서는 16.4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 이해력과 달리 금융 이해력에서는 언어가 다른 다문화 그룹보다도 약간(1.4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4개 분야 중 거시경제 분야에서 성인과의 점수 차이(23.5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금융 분야는 17.5점, 금융은 17.0점의 차이가 있었다. 미시경제 분야는 13.3점으로 조사 분야 내에서 가장 작은 점수 차이를 보였다.

분야별 영역에서 살펴보면 미시경제 분야에서 교환과 이득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30.7점의 점수 차가 나타났다. 그 외에도 경제 주체, 합리적 선택 영역에서 10점 후반대의 점수 차를 보였다.

<표 2-9> 대상별 경제·금융 이해력 점수

(단위: 점)

	성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차이 (성인-북한이탈주민)
경제 이해력	62.8	56.7	56.1	41.0	46.8	16.0
금융 이해력	67.8	59.9	63.4	52.8	51.4	16.4

자료: KB금융공익재단, 『2016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2016; 금융감독원, 『2015년 금융이해력 조사』, 2015.

<표 2-10> 북한이탈주민 경제 이해력 수준

(단위: 점)

구분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 경제	금융
성인 전체	63.1	45.3	80.4	66.2
다문화	43.0	16.2	55.8	46.8
북한이탈주민	49.8	21.8	62.9	49.2
성인 전체와의 격차 (성인 전체 점수-북한이탈주민)	13.3	23.5	17.5	17.0

자료: KB금융공익재단, 『2016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2016.

<표 2-11> 미시경제 분야 북한이탈주민 경제 이해력 정도

(단위: 점)

대분류	소분류	문제 유형	성인	북한이탈주민	성인과의 점수 차 (성인 - 북한이탈주민)
미시경제	경쟁	이해력	68.1	57.0	11.1
	경제 주체	이해력	87.6	70.1	17.5
		이해력	15.6	10.1	5.5
	시장과 가격 결정	응용력	90.2	90.1	0.1
		응용력	51.4	37.6	13.8
		이해력	80.4	66.7	13.7
	합리적 선택	이해력	32.1	16.9	15.2
		이해력	60.3	55.6	4.7
	교환과 이득	이해력	61.0	30.3	30.7
	공공재	이해력	50.8	34.2	16.6
혁신	응용력	59.2	46.1	13.1	

자료: KB금융공익재단, 『2016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2016.

<표 2-12> 거시경제 분야 북한이탈주민 경제 이해력 정도

(단위: 점)

대분류	소분류	문제 유형	성인	북한이탈주민	성인과의 점수 차 (성인 - 북한이탈주민)
거시경제	국내총생산	이해력	24.0	17.9	6.1
	재정 지출	이해력	70.9	31.2	39.7
	인플레이션	응용력	40.9	16.4	24.5

자료: KB금융공익재단, 『2016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2016.

거시경제의 경우 재정 지출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 정도에서 일반 성인과 크게 차이가 났으며, 인플레이션, 국내총생산의 경우 절대 점수가 10점대로 나타나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경제 분야에서는 2개 문항에 대해 모두 10점 후반대의 점수 차를 보였다. 그러나 절대 점수는 각각 69.8점, 56.0점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점수대를 보여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로 조사되었다.

금융 분야에 대한 조사는 경제 이해력 조사와 금융 이해력 조사에서 모두 이루어졌다. 문항은 일부 상이하나, 평균적으로는 비슷한 정도의 점수 차(경제이해력 조사 16.0점, 금융이해력 조사 16.4점)를 보였다. 이자율의 경우 높은 점수 차를 보였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점수는 두 조사에서 모두 절대 점수가 50점을 넘어 다른 문항에 비

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입과 지출은 일반 성인과 비슷한 점수를 보였으며, 절대 점수도 83.1점(성인 84.0점)으로 높은 이해력을 보였다.

<표 2-13> 국제 경제 분야 북한이탈주민 경제 이해력 정도

(단위: 점)

대분류	소분류	문제 유형	성인	북한이탈주민	성인과의 점수 차 (성인 - 북한이탈주민)
국제 경제	국제 거래	응용력	89.1	69.8	19.3
	국제 거래 (교환과 이득)	분석력	71.6	56.0	15.6

자료: KB금융공익재단, 『2016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2016.

<표 2-14> 금융 분야 북한이탈주민 경제·금융 이해력 정도

(단위: 점)

대분류	소분류	문제 유형	성인	북한이탈주민	성인과의 점수 차 (성인 - 북한이탈주민)
경제 이해력 조사	이자율	응용력	75.7	59.2	16.5
	수입과 지출	이해력	84.0	83.1	0.9
	금융시장	이해력	57.9	32.1	25.8
	화폐의 기능	이해력	47.1	22.3	24.8
금융 이해력 조사	이자율	이해력	93.7	50.5	43.2
		응용력	68.4	41.1	27.3
	복리 개념	이해력	57.5	23.4	34.1
	인플레이션	이해력	87.7	40.3	47.4
	수익률과 위험도	이해력	84.1	36.0	48.1
	예금자보호제도	이해력	69.2	32.9	36.3

자료: KB금융공익재단, 『2016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2016; 금융감독원, 『2015년 금융이해력 조사』, 2015.

두 조사 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일반 성인과 비교하여 취약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 성인과 비슷하거나 절대 점수가 높은 분야는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성인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 절대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점수 차이만으로 교육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생각하는 경제 이해력을 파악하기 위해 살펴본 북한이탈주민 대상 FGI⁸ 결과에서 북한이탈주민은 특히 남북한의 경제체제와 용어의 차이(외래어, 서로 다른 용어, 생소한 경제 용어 등)에서 오는 어려움이 크다고 응답했다. 모든 대

상이 다단계 및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를 직·간접으로 경험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한 보험, 펀드 등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거나 적절한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신용 카드 사용에 대해 막연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많았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크나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은 부족해 전문가 의견과 같이 경제교육이 양적으로 많지도 않지만, 교육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북한이탈주민 한국 사회 적응 실태

남북한의 경제체제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져온다.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경제 지식이나 기술 없이 수동적인 삶을 살았지만,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제 지식이나 기술은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주체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취업과 창업을 통해 소득을 얻고, 건전한 금융 의사결정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생활 중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에서의 적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개인 면담 및 FGI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가. 노동시장 적응 실태

1) 노동시장 참여 및 적응 현황

2023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4%로 2021년 이후 상승하고 있다. 2023년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60.5%, 실업률은 4.5%로, 일반 국민의 고용률(63.5%)보다 낮고 실업률(2.7%)보다 높았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81.4%로 일반 국민의 76.8%보다 높았지만, 그중 일용근로자 비율이 북한이탈주민이 12.7%, 일반 국민 3.7%로 나타나 일용직에 종사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일반 국민에 비해 높았다.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도 245.7만원으로 일반 국민 대비 55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남북하나재단, 2023a).

8 2020년에 KDI에서 진행한 FGI로, 북한이탈주민 20대 대학생, 20~30대 직장인, 40~50대 장년층, 60대 이상 노년층 등 5개 그룹으로 각 5명씩 구성해 진행하였다.

<표 2-15> 일반 국민 대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주요 지표

구분	북한이탈주민	일반 국민
경제활동참가율	63.4%	65.3%
비경제활동참가율	36.6%	34.7%
고용률	60.5%	63.5%
실업률	4.5%	2.7%
3개월 평균 임금	245.7만원	300.7만원

자료: 남북하나재단, 『2023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2023a; 남북하나재단,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2023b.

북한이탈주민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북하나재단, 2023a).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생활에서 경제적 안정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훈련 장려금, 취업 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평균 근속 기간이 74개월인 것과 비교해 북한이탈주민 평균 근속 기간은 36.3개월로 매우 짧다(남북하나재단, 2023a). 많은 취업 및 창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안정적인 직업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 초기에 하나원은 직업과 진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하나원 퇴소 이후에도 지속해서 자격증 취득이나 직업 교육,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원 아래 2023년 북한이탈주민의 51.9%가 직업 교육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서비스 분야의 직업 교육 훈련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직업 교육 훈련을 수료하고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비율은 50.3%에 달했다(남북하나재단, 2023a).

하지만 직업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시장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부모의 직업이 자녀에게 세습되어 진로 선택의 자유가 없다. 북한에서 직업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를 위한 사회적 역할 분담이라는 성격을 가진다(조인수 외, 2020). 또한 일을 통해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을 의무로 인식하다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 중국 등에서 경제생활을 경험하며 비로소 일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정영선, 2018). 노동을 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소득을 얻는 경제적 행위이자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보는 한국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직업을 통해 경제적 보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직업 선택 요인으로 ‘수입’을 44.8%로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었다. 2023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국민의 40.9%가 직업 선택 요인으로 ‘수입’이라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일반 국민의 인식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일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경제적 보상을 추구하는 인식이 현금성 지원 제도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취업을 위해 직업 훈련을 수강하거나 장려금을 받지만,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이진석, 2020).

통일연구원의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 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체제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유추할 수 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경쟁, 노력에 기반한 보상 및 성과처럼 시장경제를 나타내는 요소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최고 경영자와 노동자의 임금은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많아 이질적인 모습을 보였다(김수암 외, 2016).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및 산업의 국가 소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이 21.75%로 일반 국민의 의견(11.29%)에 비해 약 2배 높았다. 생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도 43.93%로 일반 국민의 인식(28.51%)에 비해 크게 높았다(조인영·박종민, 2020).

종합하면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 대비 임금 수준이 낮고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의 노력과 경쟁의 중요성, 소득의 차이를 인정하며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도, 큰 정부를 강조하는 등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자유와 경쟁, 사유 재산 등 시장경제체제의 대표적인 특징을 북한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 참여 경험은 남한에서의 취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정혁, 2018). 경제활동을 경험하며 경쟁이나 능력주의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소득이나 취업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박경량 외(2024)의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 이해도가 남한에서의 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및 공공 서비스 제공 등 국가의 소득 재분배 역할을 선호하기보다 개인의 자율성이나 책임, 경쟁을 선호할 경우 더 높은 소득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2) 노동시장 적응 경험 분석: 개별 면담 및 FGI 결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은 정착을 위한 최고의 수단이지만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취업에 성공하면 소득을 얻어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지급되는 기초 생활 수급비에만 의존해야 하며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취업을 원하지만, 일자리가 주어지는 북한에서와 달리 한국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스스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일 자리를 찾고 안정적인 직업을 통해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여 정착하고 보니, 정말 좋은 세상이다. 내가 능력껏 벌어서 돈을 벌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좋고 천국이라고 인식한다.”(북한이탈주민 단체 운영자 A)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일자리 문제이다. 북한에서의 일자리는 각 시, 군 노동부에서 알아서 공장기업소에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는다. ... 일은 주어진 대로 맡겨진 일을 8시부터 5시까지 8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하면 그만이다. 특별한 직업 교육 훈련을 받지 않아도 취업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실업자가 없다.”(북한이탈주민 단체 운영자 B)

“남한에서의 취업은 그야말로 높은 벽이다. ...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 직업 교육 훈련을 받는다. 남한에는 직무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취업이 어려워 실업자가 되기 쉽다.”(북한이탈주민 단체 운영자 C)

북한이탈주민은 구직 활동을 하며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과는 달리 직무가 요구하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한계에 부딪힌다. 직무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직업 교육 훈련을 받고자 한다. 하지만 교육을 받으면서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북한이탈주민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 기관을 찾는다.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취업에 성공해도 소통의 문제, 문화 차이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 후 2~3개월 기간 하나원의 정착 교육을 마치고 한국 사회로 나왔을 때 배우고 싶은 욕망과 일하고 싶은 욕망이 크고, 이왕이면 정착을 잘하기 위해 일반인 직업 훈련 기관에서 배우기를 원한다. 하지만

외래어가 많고 언어소통이 안 되어 말귀를 알아듣기 힘들고 일반인들이 당연히 아는 용어조차 탈북민들은 당연히 몰라서 어려움을 겪으며,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배움을 포기하고 다시 탈북민 전문 교육 기관을 찾기도 한다.”(북한이탈주민 단체 운영자 B)

북한과는 다른 취업 과정, 직업에 대한 태도로 북한이탈주민은 일자리를 얻는 것에 혼란스러워한다. 취업 지원 기관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돕기 위해 자격증 취득 과정이나 직업 교육 훈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단순히 직무를 위한 기술 교육만을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장기적인 진로 설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동적으로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역량을 스스로 파악하고 진로 설계 및 관리를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나. 금융시장 적응 실태

1) 금융시장 적응 현황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서는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금융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금융시장이 복잡해지면서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금융 거래에서 최종 선택의 책임이 금융 거래 당사자 개인에게 있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금융 기초 지식의 부재로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은찬, 2016).

금융 생활에 대한 경험 부족은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시장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주민의 소득은 미래를 준비하도록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북한 내에서 은행도 저축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정영선, 2017). 이런 체제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저축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 주민의 82.6%는 은행 거래 경험이 없으며, 이웃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32.9%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수룡·이정희·조봉현, 2018).

금융 기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고, 고리 사채 등의 사금융이 익숙한 북한이탈주민은 금융 지식이나 금융 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금융 관련 비합리적인 선택을 경험하고 있다. 금융 생활에 대한 경험 부족은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으며, 다

단계를 쉽게 돈 버는 기술로 인식하게 하였다. 금융 관련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불법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62.3%가 각종 금융 사기를 경험하며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김경숙, 2021).

북한이탈주민은 금융 상품 광고에 쉽게 현혹되어 손해를 보거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또는 과도한 소비로 합리적인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정은찬, 2016).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소비 생활 적응 수준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전체의 70%가 넘는 응답자가 ‘월급을 타기 전에 돈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답해 소득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상희 외, 2014). 위험이나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하거나 상환 능력을 점검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금융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도 있었다. 금융 피해 경험으로 점차 금융의 중요성을 깨닫고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하는 북한이탈주민도 있었지만, 일부는 반복적인 금융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숙·박주현, 2022).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재무 지식과 재무 관리 행동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에 비해 재무 지식이 낮았으며, 양호한 재무 관리 행동을 가진 비율도 일반 국민에 비해 낮았다. 특히 예금자보호제도, 신용 카드, 생명 보험, 적절한 비상금의 크기 등 일반 소비자가 쉽거나 보통이라고 여기는 난도의 재무 지식을 북한이탈주민은 어렵게 느꼈다. 낮은 재무 지식은 미흡한 재무 관리 행동으로 이어졌다(손지연·박주영, 2018).

북한이탈주민의 낮은 금융 이해력은 노후 준비에도 영향을 주었다. 2023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55.3%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과반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것은 일반 국민의 69.7%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된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없음’이 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노후 준비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14.8%였다(남북하나재단, 2023a).

북한이탈주민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의 원인으로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노후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투자하다 손해를 볼 경우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근·김효주, 2018; 손정국·김영민, 2021). 다양한 금융제도에 대한 경험이 없어 한국에서는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노년기에도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하며 경제

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노후 준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2) 금융시장 적응 경험 분석: 개별 면담 및 FGI 결과

북한에서 상품의 가격은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북한 당국의 계획으로 결정된다. 북한 내에서 비공식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장마당에서도 가격은 국가에서 정한 가격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책정되고 있으며,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이곳에서 거래를 경험하고 있었다. 일을 한 대가로 얻는 소득도 당의 계획에 따라 분배되며, 소득 규모도 작아 북한이탈주민은 소득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또한 상품의 가치나 가격을 비교해 소비하는 경험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당에서의 가격은 누가 만들어내지 못한다. 통상적으로 정해진 국정 가격보다 좀 웃돈을 만들어 내서 흥정하여 만들어 내기 때문에 꼭 법칙으로 존재하지는 못한다.”(북한이탈주민 단체 운영자 B)

“일정한 노동을 하고도 그 대가로 살 수 있는 것이 극히 없어 경제 개념이 없이 살았으며, 심지어 쌀, 부식물 가격이 얼마인지 기억해 본 적이 없으며 상품 또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북한이탈주민 단체 운영자 A)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금융 거래를 경험하지 못해 한국에서도 은행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북한은 단일 은행 체제라는 금융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의 금융제도나 기관,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교육 내용에 금융제도, 금융 기관, 신용에 대한 과정을 포함해 진행하고 있었다.

“처음 남한사회에 나왔을 때 통장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얼마나 돈이 많길래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심스러웠고, 은행에서 통장으로 돈을 뽑으러 갔을 때 정말로 돈이 나오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북한이탈주민 단체 운영자 A)

“이미 북한에서는 단일 은행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1, 2금융권이나 그 밖의 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어 쉽게 고금리 대출 또는 제도 밖의 대출을 좀 거리낌 없이 이용할 수도 있고, 본인의 신용이 어떻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단체 운영자 B)

“5만명 중 대부분이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정작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채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북한이탈주민 교육 담당자 A)

북한이탈주민은 금융 경험이 부족해 금융 기관이나 상품에 대한 이해가 낮을 뿐 아니라 금융제도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여러 상품을 비교하거나 수익률과 위험성을 고려해 투자하는 등 금융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지식과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올바른 금융 의사결정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금융 피해 방지 및 대처 방안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3장

북한의 경제체제와 남북한 경제교육 비교

제1절 북한의 경제체제

1.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가.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토대를 둔 계획경제

북한은 해방 이후 분단되어 사회주의 국가 이념 속에서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였다. 그 결과 생산 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국가가 자원의 배분을 담당하는 계획경제체제가 발달하였다. 계획 수립을 비롯해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중앙 당국에 집중되어 있고, 하부 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북한식 계획경제체제는 당과 정부가 기업이 생산하는 세부 생산물까지 계획하는 ‘계획의 일원화 및 세부화’로 요약할 수 있다. 1964년 도입된 ‘계획의 일원화’는 국가 계획위원회가 경제 전 분야의 노동당 정책을 계획하고, 그 집행까지를 감독한다. 내각의 각 위원회와 각 성의 계획 부서도 계획서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국가 계획위원회의 통제와 조정을 받아야만 한다. 북한은 이러한 계획의 일원화를 통해 경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부 기관이나 지방이 주관적 판단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965년 도입된 ‘계획의 세부화’는 산업이나 개별 기업이 수립한 계획이 서로 맞물

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3-1]과 같이 북한에서 경제 계획은 ‘예비 숫자 작성 → 통제 숫자 작성 및 당 비준 → 종합적인 통계 초안 작성 → 계획 최종 검토 및 확정’이라는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수립된다. 북한 정부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제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크고 작은 모든 경영활동이 빈틈없이 맞물리도록 하여 사소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이렇게 수립된 국가 계획에 대해 수립한 기관이나 감독·통제하는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계획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계획 작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모든 사업을 법적 요구에 맞게 조직적으로 진행하도록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만약 경제 계획을 어겨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국립통일교육원, 2021).

그러나 ‘계획의 일원화 및 세부화’ 원칙에 따른 중앙집권적 계획 관리는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2002년 7월 1일 발표한 경제 관리 개선 조치(이하 7.1 조치)를 통해 국방 공업, 기간 산업과 같이 전략적으로 의의가 있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선행 경제 지표만 중앙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 외 지방 지표, 기업 소지표 등은 해당 기관이나 공장, 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생산하고 목표 달성도 현물에서 금액으로 전환해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다른 특징은 생산 수단을 사회나 집단이 소유하는 사회주의 소유제도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20조에 ‘생산 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그림 3-1] 북한의 4단계 경제 계획 작성 과정

1단계	예비 숫자 작성	• 지구계획위원회 및 내각의 각 위원회와 성의 하부 생산 단위가 제출한 계획 숫자를 통합하여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하는 단계
▼		
2단계	통제 숫자 작성 및 당 비준	• 국가계획위원회가 당중앙위원회의 정책 목표와 방향을 토대로 하부 단위 기관이 보고한 예비 숫자를 참고하여 통제 숫자를 작성한 뒤 당의 비준을 얻는 단계
▼		
3단계	종합적인 통계 초안 작성	• 국가계획위원회가 하부 단위 기관 계획 부서에서 비준된 통제 숫자를 근거로 작성한 계획 초안을 토대로 종합적인 계획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
▼		
4단계	계획 최종 검토 및 확정	• 국가계획위원회가 제출한 계획 초안을 내각 전원회의나 당중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확정

있다. 북한에서 국가가 소유하는 생산 수단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 북한 내의 모든 자연 자원, 철도·항공·운수·체신, 중요 공장·기업소·항만·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 소유는 북한 경제 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국가는 국가 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협동단체 소유는 협동농장, 수산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 등 해당 단체 소속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와 같이 협동경제 운영에 직접 이용되는 재산으로 국한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교육도서출판사, 2013, p.127).

북한에서도 제한적이거나 개인 소유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다.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임금으로 구입한 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 근로 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 소비품 등이 개인 소유에 해당한다. 개인 소유물은 각종 수매 기관과 종합 시장 등에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상속권도 인정된다.

북한 사회는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우선하는 ‘집단주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 북한 당국은 1950년대에 농업·상공업 부문에서 개인 소유를 없애면서 개인주의가 성장할 토대를 약화시켰다. 1959년에는 집단주의적 사상 개조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시작했고, 1960년대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주의 교양 교육에 힘썼다. 1970년대에는 노동당과 근로 단체⁹에서 조직 생활과 정치사상 교양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대중 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을 집단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나. 국가의 가정(家庭)화

1)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대가정체제

북한은 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간주하고, 수령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회주의 대가정체제’를 근간으로 한 집단주의 원칙을 구축하고 있는데,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숭배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주의체제와 다른 점이 있다. 유교적 관습과 전통이 많이 남아 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 당, 인민대중의 전일적 통일체’라는 전체주의적 이념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

⁹ 북한의 근로 단체에는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이 있다. 북한 당국은 1996년에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바꾼 뒤, 2016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2021년에는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개칭했다. 조선민주여성동맹도 2016년에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북한에는 두 개의 가정이 있다. 혈육으로 구성되는 보통의 가정과 수령을 아버지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북한 주민은 이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족 구성원으로,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아버지인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한다고 교육받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수령’은 정치적 지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전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體現者)’며 ‘당의 최고영도자’를 일컫는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영도의 유일 중심”이라고 하여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국립통일교육원, 2023, p.15-17).¹⁰

북한은 이러한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기초하여 수령이 은덕을 베풀면 모든 사회 구성원은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국립통일교육원, 2021). 이러한 국가의 가정화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 세계에 서열화된 사회적 관계를 내면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의 지시를 집행하는 당 간부가 노동당 조직과 근로 단체 등의 대중 위에 군림하도록 하는 한편, 만 7세부터 65세까지의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조직 생활을 통해 집단주의적 삶의 방식을 내재화시켰다.

2) 집단주의 원칙

북한에서 주민들의 의무와 권리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개인적 목표 가치보다는 집단적 목표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구성원을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1960년대에 내놓은 구호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북한 사회의 집단주의를 상징하는 구호이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경제 개혁·개방 이후 집단주의적 대중 운동이 자취를 감춘 데 비해, 북한 당국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 이래 오늘날까지 대중 운동을 통해 주민들을 집단주의자로 만들고, 집단주의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시작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 1990년대

¹⁰ 북한에서 수령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한정된 칭호이다. 북한은 2016년 「김일성·김정일 헌법」을 개정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함께 ‘영원한 수령’으로 표기하였고,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에게 ‘위대한 영도자’라는 칭호를 붙이면서 김일성·김정일과 동일한 수령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또한 2019년 4월 「김일성·김정일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무위원장에게 ‘국가대표’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과 같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되어 최고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았다.

후반 ‘제2의 천리마 대진군’, 2016년 시작된 ‘만리마 속도 창조 운동’ 등이 대중 운동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2. 북한의 경제정책¹¹

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북한에서 주장하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경제를 의미한다. 즉, 북한의 자원과 주민의 힘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해야 북한 주민들의 생활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국제 관계에서도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해야 세계적인 혁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경제적·기술적으로 뒤떨어졌던 국가들은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해야만 제국주의자들의 울가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주장하는 자립은 폐쇄적 성격이 강하다. 국가 간 무역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제 협력을 통한 선진 기술이나 해외 자본 도입 등도 어려워 경제성장에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나. 중공업 우선 정책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은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을 우선 발전시켜 자립적 공업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중공업이 먼저 발전하지 않으면 사회주의 공업화의 실현은 물론 경공업과 농업도 발전시킬 수 없으며, 확대 재생산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자본과 기술의 지원 없이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기는 어렵다. 그 결과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생필품을 비롯한 심각한 물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¹¹ 경제정책별 기초의 내용은 통일부 북한정보포털(<https://nkinfo.unikorea.go.kr/nkp/pge/view.do>)을 참고해 작성하였다.

다. 경제·국방 건설 병진

‘경제·국방 건설 병진 노선’은 경제 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산업을 군산복합형(軍産複合形)으로 조성하고, 북한 경제 내에 인민 경제 외에 군수 경제를 독립적 경제 구조로 정착시킨 정책이다. 김일성 시대에 추진된 병진 노선은 김정일 시기에 ‘선군 경제 건설 노선’을 주요 경제정책 기조로 추진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에도 본질적인 정책 기조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채택했다. 당시 북한은 ‘현시대에서는 핵무력 강화가 혁명 발전의 합법적 요구’이므로 이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시켜 나갈 것이며, 경제 건설도 동시에 병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은 국방 부문에 예산을 과잉 배분하여 산업 부문의 불균형과 소비재 산업의 발전을 위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로부터 대북 제재를 초래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¹²

라. 김정은의 경제정책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한 대표적인 경제정책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과 ‘경제 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이다.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은 2016년 개최된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제시된 경제 전략으로 2016~2020년까지 전력 문제 해결, 석탄·금속·철도운수 부문의 획기적인 발전, 기계·화학·건설·건재공업 부문 발전, 농업·수산업·경공업 부문 발전, 대외 무역과 합영합작 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경제개발구를 통해 대외 경제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공장과 기업소의 생산 시설을 정상화하고, 장기 목표로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정면 돌파’와 ‘자력갱생’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 자연재해까지 겹쳐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¹²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혁명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공표했으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라 강력한 대북 제재를 받고 있다.

이에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개최하여 ① 경제 자립 구조의 정비 및 보강, ②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국산 제품 생산 증대, ③ 인민 생활 향상을 중요 과제로 하는 새로운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2021~2025년까지 금속·화학 등 기간산업에 투자를 집중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농업의 물질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며, 원자재의 국산화 및 재자원화를 통해 소비품 생산을 늘리고, 자립 경제의 잠재력을 키우는 것을 강조한다.

2022년 2월에는 “대외 경제 부문에서 국가의 유일 무역 체도를 환원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기업의 무역 자율화’ 대신 ‘중앙집권적 무역 시스템’ 복원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북한이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한 ‘내각 책임제’를 통한 중앙집권적 기업 경영 관리,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및 일원화 통제 체계 강화 등의 사회주의 경제 관리 원칙 준수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국립통일교육원, 2023).

3. 북한의 시장화와 경제생활의 변화

가. 1990년대 경제난과 시장의 형성

1994년 북한에서 발생한 경제난과 대기근은 중국과의 밀무역이 성행하고, 북한 내에서 시장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난과 대기근으로 국가에 의한 배급제를 실시하지 못할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북한 주민들은 부족한 양곡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농민 시장¹³과 북한 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난 암시장으로 모여 들었다. 북한 당국도 시장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암시장 등을 묵인하였다. 1990년대 중반 북·중 접경지대에 무역을 위한 통상구를 개방하고, 국가 지정 무역 기관 외에 정부 부처인 성(省), 기관, 군부대, 지방의 도인민위원회, 공장·기업소들도 대외 무역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 결과 국제 사회의 지원 물자와 북·중 간 공식 또는 비공식 무역이나 밀수 등을 통해 대규모로 유입된 재화가 시장에 조달되었다. 텃밭이나 소토지 등에서 경작된 농축산물과 개인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물품도 시장에 유입되었다. 1990년대 말 북한 주요 도시에는 대규모 도매 시장과 함께 특화된 시장들이 생겨나고, 전국적 규모

¹³ 농민 시장은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합법적인 시장이다.

의 유통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처럼 북한 내부에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자 북한 당국은 2002년 7.1 조치를 시작으로 국가 통제 밖에서 자생적으로 확산되는 시장을 계획경제체제하에 편입하게 된다.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제도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일부 도입한 것이다. 7.1 조치는 ‘평균주의 타파’와 ‘번 돈에 의한 평가’라는 원칙하에서 시행된 조치로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가격을 인상하여 농민 시장 수준으로 현실화하고(쌀가격 기준), ② 임금을 대폭 인상했으며(군인과 중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음), ③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④ 계획경제의 기능 일부를 지방 정부와 기업으로 이관한 것이다.

7.1 조치 이후 주민들이 시장과 상점에서 구입하는 생필품이 점차 확대되었다. 국영기업소, 협동농장 등 각 경제 단위에 분권적 자율 경영 권한이 일부 부여되고, 전국 시·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10일장으로 운영되던 농민 시장이 상설 종합 시장으로 개편되었다. 과거 농민 시장에서 거래가 금지되었던 양곡은 2002년 9월부터, 공산품은 2003년 3월부터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장사의 형태도 ‘등짐장사’에서 시장에서 시장 사용료(장세)를 내고 공식적으로 매대를 빌려 장사하는 ‘매대장사’로 바뀌었다.¹⁴ 사회주의 물자 교류 시장과 수입 물자 교류 시장도 개설되어 기업들끼리 원자재와 생산재를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북한에는 사회주의 물자 교류 시장과 종합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¹⁵ 종합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414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홍민, 2022).

나. 북한판 화폐 자본가로 성장한 ‘돈주’¹⁶

2003년 시장 기능을 부분적으로 제도화한 상설 시장화 조치 이후 계획경제와 비공식 경제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 위기 이후 암

¹⁴ 시장 운영 과정에서 북한은 시장 사용료(장세)를 징수하고 있다. 시장 사용료는 채소류, 생선류, 의류, 공산품 등 판매 물품에 따라 최소 5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다양하며,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사용료가 높다(홍민 외, 2016;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자료).

¹⁵ 북한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운영되는 시장은 생산물 시장뿐이다. 생산 요소(자본, 노동, 토지) 시장의 운영은 공식적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부를 축적한 개인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운영 및 확산되고 있다.

¹⁶ ‘돈주’란 ‘돈의 주인’의 줄임말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보통 1만달러 이상을 보유하면 돈주라고 불린다(『동아일보』, 2015. 9. 15).

시장, 장마당에서 부를 축적한 일부 주민들이 돈주로 성장했다. 이들은 시외버스·택시 등 지방 운수, 도소매 및 국영 상점 등 유통·물류, 그리고 건설·채굴·제조업 분야 등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돈주들은 공장이나 기업소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명칭을 빌려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경영활동을 하고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해당 기관이나 기업소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였다.

북한 당국은 돈주들의 이러한 활동을 검열하고 통제하였다. 하지만 돈주들은 자원이 부족한 북한 사회에서 경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거나, 권력층과 공생해 국가가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비공식 무역 활동을 수행하면서 북한 내 경제활동의 주요 행위자로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돈주는 북한에 제도적인 상업 금융 시스템이 없는 점을 이용해 자금을 대출하거나 융통해 주고 이자를 받는 북한관 화폐 자본가로 변모해 가고 있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돈주들의 사금융 행위는 예금과 송금, 자금 이체, 물자 대금 결제, 담보 대출, 국영 기업의 계획 이외의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돈주 간 대부 등 일반 상업 금융 기관들이 행하는 금융 행위로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국립통일교육원, 2023).

북한 당국은 이러한 시장경제 활동의 확장을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2005년 10월, 사실상 배급제라 할 수 있는 식량 전매제를 도입하고 이후 개인 경작지 및 상행위 단속, 종합 시장 폐쇄, 화폐 개혁 단행 등 시장경제 요소를 단속하고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박형중·조한범·장용석, 2009).

2009년 북한 당국은 시장활동 확대를 억제하는 한편, 재정 수입을 늘리고 중앙집중적 계획경제로의 복귀를 위해 화폐 개혁을 단행하고 종합 시장을 폐쇄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북한의 화폐 개혁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구화폐와 신화폐를 한 가구당 10~15만원(북한원)까지 100대 1의 비율로 교환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북한의 화폐 개혁 조치는 2개월 만에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의 화폐 개혁은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해 자립적으로 생존해야 했던 북한 주민 경제생활에 치명적 악영향을 주었다. 이미 북한 주민들의 가계 경제는 대부분 시장활동을 통해 유지되고, 계획경제 부문도 시장에 의존해 작동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 수입도 시장의 토대 위에서 상당 부분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2010년 2월부터는 다시 시장활동이 허용되고 외환 사용을 묵인하는 등 통제가 완화되었다.

다. 북한식 경제 관리 체계의 변화¹⁷

북한은 화폐 개혁 실패 이후 시장을 적극 활용해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고 체제 내 구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돈주들의 개인 유희 자금 활용을 합법화하고, 이를 시장에 활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6월에는 내수 시장을 견인하기 위해 이른바 북한식 경제 관리 방법이라는 조치를 도입하여 국영 기업소, 국가 기관, 협동농장의 시장 연계 활동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식 경제 관리 방법은 경제 단위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고 물질적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한 조치이다.

2013년에는 농업 분야에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 담당 책임제’가 실시되어 사실상 가족 단위로 영농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포전 담당 책임제란 협동농장의 말단 조직인 ‘분조’가 경작한 생산물 중 초과 생산물을 경작 농민들에게 현물로 분배하는 제도이다. 2014년에는 국영 기업 분야에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가 실시되었다. 공장·기업소에 일부 권한을 위임하여 국가 계획 이외에 기업소 자체 계획에 따라 생산량과 품질, 가격, 임금 및 인력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 생산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다.

북한에서 상업은 주민에게 물품을 배급하기 위한 유통과 관리 기능을 말한다. 북한의 상업망은 도매 상업망, 소매 상업망, 사회 급양망, 수매망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소매 상업망이다. 소매 상업망은 규모에 따라 상점, 매점, 매대로 분류되며, 취급 품종에 따라 전문 상점과 종합 상점으로 구분된다. 상업 유통 부문도 7.1 조치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7.1 조치 초기에는 국영 상점망을 강화하고 농민 시장, 장마당 등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물자 공급이 부족해지자 2002년 12월 초부터는 장마당에서 농산품 이외에 공산품 거래까지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3월 말 평양에 종합 시장을 개설하였고, 이후 상점이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영업이 부진한 국영 상점은 기관이나 기업소 등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영 상점’과 ‘일반 상점(위탁·수매·직매상점)’으로 상점의 형태가 이원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주민들이 국영 상점보다 종합 시장을 더 찾게 만들고, 빈부격차를 야기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에 2007년 10월부터는 시장에서의

¹⁷ 아래 내용은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의 경제 관리 내용을 참고해 작성했다.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상거래 연령을 제한하는 등 유통 분야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2009년에는 화폐 개혁을 단행하면서 종합 시장을 10일장인 농민 시장으로 환원시키고, 거래 품목도 농산물과 토산품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북한 전역에서 상품 유통에 차질이 생기고 물가가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2010년 2월 종합 시장 철폐 조치를 해제한 이후 시장에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2011년부터는 평양을 중심으로 국영 외화 상점을 확충하고 있다.

북한에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본 척도는 투입된 노동 비용을 근간으로 산출되는 사회적 필요 노동 지출이다. 하지만 가치와 가격을 인위적으로 분리하기도 한다. 대중 소비재 가격은 낮게 정해지지만, 공급량이 제한된 소비재는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사회적 필요 노동 지출과 관계없이 가격을 높게 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격 결정에 임의성이 크게 작용하면서 국정 가격과 시장 가격 간 큰 차이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7.1 조치 이후 가격 체계를 전면적으로 현실화¹⁸하여 모든 가격과 임금의 기준을 쌀로 정하고, 그 수준은 실제 생산비와 수급 상황 그리고 국제 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하였다.

가격 결정에서 부분적이지만 분권화도 이루어져 지방 공장들이 자체 생산하는 소비재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국가 계획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물자 교류 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일부 생산재 기업들이 서로 합의하여 가격을 정하는 관행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북한에는 국정 가격, 시장 가격, 합의 가격 등 다양한 형태의 가격이 존재한다.

북한에서 소득은 사회적·공동적인 소비(기관관리·과학·교육·보건·기타)와 예비의 조성, 기타에 돌려지는 몫과 직접 근로자들에게 돌려지는 몫으로 구분되어 계획적으로 분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동 임금은 노동 보수 계획에 따라 분배되고 관리된다. 노동 보수 계획은 주로 노동자와 사무원의 생활 수준, 상품 유통 규모, 소비와 저축 관계 등을 고려해 작성된다. 노동 보수 계획은 보수 형태에 따라 생활비 계획, 장려금 계획, 상금 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7.1 조치로 이러한 북한의 보수 체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노동자, 사무원 등 전 직종을 대상으로 임금을 평균 18배 인상하고, ‘노동 결과에 따른 분배 원칙’ 아래 차등

18 식량이나 생필품의 국정 가격을 농민 시장과 비슷하게 평균 25배(쌀 1kg당 8전→44원, 옥수수 1kg당 6전→24원, 세수 비누 1개당 2원→20원 등) 인상하였고, 공공요금도 20배 이상(버스·지하철 요금 10전→2원, 전기료 kW당 3.5전→21원) 인상하였다.

<표 3-1> 북한 경제 관리 체계의 시장화 정도

	기본 원칙	2002년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이후
농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 입각한 소위 “주체농법 실현”이라는 노동당의 정책 노선에 초점 - 국가적 소유: 국영 농·목장, 국영 농기계 작업소, 국영 관개관리소 등 - 협동적 소유: 협동농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 담당 책임제’ 실시 - 당국이 제공한 농자재 비용과 국가 몫을 제외한 초과 생산물은 경작 농민들에게 현물로 분배 · 협동농장에 농장 책임 관리제 적용
기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의 사업체계’하에서 공장 당위원회 중심으로 집체적 관리 - 북한의 생산 수단은 모두 사회화되어 있어 근로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늘리기 위한 정치사업(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결합)에 집중 - 실무적 차원에서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지배인을 별도로 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국가의 통일적 관리를 재강조하지만 2009년 화폐 개혁 실패 이후 시장에 대한 묵인 지속 · 2014년 국영 기업에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도입 등 기업 관리에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시범 조치 시도 - 공장·기업소에 일부 권한을 위임 - 초과 생산품은 시장에서 판매 허용
유통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에게 배급하기 위한 유통과 관리 수단의 기능 수행 - 도매 상업망, 소매 상업망, 사회 급양망, 수매망 등으로 구분 - 도매 상업은 중앙, 소매 상업은 지방에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 조치 초기에는 국영 상점망을 강화하고, 농민 시장과 장마당 통제 · 2002년 12월부터 장마당에서 공산품 거래도 허용 · 2003년 3월 말 평양에 종합 시장 개설 이후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고 국영 상점과 일반 상점(위탁·수매·직매 상점)으로 상점 형태 이원화 · 2011년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국영 외화 상점 확충
가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가격: 투입된 노동 비용을 근간으로 산출되는 사회적 필요 노동 지출로 결정 - 대중 소비재 가격은 낮게, 공급량이 제한된 소비재는 수요 조절을 위해 높게 책정 - 가격 결정에 임의성이 크게 작용해 국정 가격과 시장 가격 사이에 큰 차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이후 정치적 사건, 곡물의 작황 등에 따라 시장 가격이 수시로 변동 · 현재 국정 가격, 시장 가격, 합 가격 등이 존재 - 모든 가격과 임금은 쌀을 기준으로 실제 생산비, 수급 상황, 국제 가격에 기초하여 결정 -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시장 수요와 공급 원리를 부분적으로 반영, 공급이 부족한 대중 소비재는 가격을 높게 설정 - 지방 공장이 생산하는 소비재는 자체적으로 가격 결정 권한 부여 - 국가 계획 밖의 물자 교류 시장에서 거래 시 일부 생산재 기업들이 서로 합의하여 가격을 정하는 관행 발생
분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은 사회적·공동적인 소비(기관관리·과학·교육·보건·기타)와 예비의 조성, 기타에 돌려지는 몫과 직접 근로자들에게 돌려지는 몫으로 구분되어 계획적으로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직종의 임금을 평균 18배 인상 · 2005년부터 7.1 조치가 후퇴하면서 보수 체제도 평균주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환원 · 2012년 분배 관리의 변화 가능성 시사: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하는 것’으로 언급

자료: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경제 관리 부문의 내용 재정리(<https://nkinfo.unikorea.go.kr/nkp/pge/view.do>).

지급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2005년부터 7.1 조치가 후퇴하면서 보수 체제도 평균주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환원하였다. 이후 2012년경부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서 분배 관리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라. 시장화가 불러온 주민들의 경제생활 변화

1990년대 초반 구소련이 붕괴하고 중국과 동유럽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한 이후에도 북한은 여전히 수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난과 시장화의 진전으로 북한 주민들의 실제 경제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북한에서 시장이 계획경제 기구의 보완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과거에도 10일마다 열리는 농민 시장에서 농민들이 협동농장에서 생산하거나 개인 텃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일부를 주민들에게 직접 팔 수 있었다. 농민들은 농민 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국영 시장에서 부족한 소비품을 사고, 도시에 사는 노동자들은 농민 시장에서 국가가 주지 못한 부식물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양곡과 공업 제품은 거래가 금지되었다.

2003년 3월에는 상설 시장화 조치를 발표하여 농민 시장을 종합 시장으로 확대·재편하였다. 기업들이 원자재와 생산재를 교류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 물자 교류 시장과 수입 물자 교류 시장도 개설했다. 북한에서는 경제난 이후 의류 유통 구조가 다변화되고 고가의 의류 구매 비중이 늘어나고,¹⁹ 개인 간 주택 매매도 활성화되어²⁰ 의식주는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돈주를 중심으로 ‘사실상의 사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법률상의 사유화’나 사적 고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2014년 1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을 개정해 “기업소는 정해진 데 따라 부족되는 경영 활동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부받거나 주민 유희 화폐자금을 동원·리용할 수 있다(제38조).”라고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돈주의 국영 기업 투자를 합법화하였다.

셋째, 북한 주민들이 개인 부업을 통해 만든 생산물을 농민 시장과 암시장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집단주의와 다른 개인주의에 눈을 뜨게 되었다. 중국 사회에서 경제이행기(economic transition)에 시장 개혁에 따른 민영 기업 증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해외여행이나 외국인 접촉 증대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청년들의 개인주의가 성장했

19 북한이탈주민 조사에 따르면 2011~2022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중 약 90%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입는 옷을 국영 상점이 아닌 시장에서 구매했으며, 백화점이나 외화 상점에서 의류를 구입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유연 외, 2022).

20 2018~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에 살 때 살림집을 개인적으로 구매했다는 응답률은 65.6%에 달하고, 국가에서 배정받았다는 응답률은 15.9%였다(김유연 외, 2022).

다는 사실(Eric Fish, 2015. 6. 23)을 고려하면, 북한 사회에서도 시장화가 진전될수록 개인주의와 소비 욕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요 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는 중앙집권적·계획적 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공장이나 기업소 단위로 독립채산제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장마당 등 자생적으로 생겨난 시장에서 생존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결국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은 합법과 비합법의 혼용으로 계획경제와 시장이 공존하는 구조를 고착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비공식 경제활동은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 가구의 약 86%가 비공식 경제활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석, 2009, 정병곤·김병연·이석, 2013, p.92에서 재인용).

제2절 남한과 북한의 경제교육

1.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

가. 사회주의 건설에 헌신하는 인재 육성

북한의 교육 목적은 문맹 타파, 사회주의 건설,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독자적인 교육 정책이 필요해지자 1977년 9월 5일 과거 김일성 연설과 교서 중에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북한 교육의 목표를 사회주의 건설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고, 지도자에 복종하는 충직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9년 김정일은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교육 목표를 ‘건결한 혁명가,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 육성으로 수정했으며, 2019년 김정일은 ‘참다운 애국가,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건설의 역군’ 육성으로 변경하였다.

<표 3-2>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의 주요 구성 및 내용

구성	주요 내용
전문	·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 점령에 있어 교육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교육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 개괄
사회주의 교육학 기본 원리	·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인간 육성
사회주의 교육 내용	· 정치사상 교양: 주체사상, 혁명 교양,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시켜 노동계급의 혁명 의식과 공산주의 도덕으로 무장 · 과학기술 교육: 선진과학과 기술의 성과 체득 및 활용 능력 제고 · 체육 교육: 체력을 증진시켜 노동과 국방 준비
사회주의 교육 방법	· 깨우쳐 주는 교수 교양 ·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 노동 결합, 조직 생활 · 사회정치 생활 강화,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결합 · 학교 전 교육, 학교 교육, 성인 교육의 병진
사회주의 교육제도	· 혁명적: 노동 계급의 혁명 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위업에 복무 · 인민적: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교육 · 역사적: 항일혁명 투쟁 시기부터 시작
기타	· 학교의 사명과 임무, 교원의 위치와 역할 · 교육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 국가적 보장, 사회적 지원 강화

자료: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21.

나. 정치사상 강화에 중점

2015년 개정된 북한 교육법은 사회주의 교육의 인간상으로 ‘자주적인 사상 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제1조), ‘건전한 사상 의식과 깊은 과학기술 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제3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치사상 교육을 앞세우면서 깊이 있는 과학기술 교육 그리고 체육과 예능 교육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국립통일교육원, 2023). 북한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 원리는 사람들을 당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인간 육성을 위해 정치사상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체육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사상 교양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주체사상 원리, 당 정책, 혁명 전통 등 사상 정신적 특질을 갖추기 위한 교양 교육과 정신 도덕적 기질을 갖추기 위한 혁명 교양, 사회주의 교양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경제교육은 혁명 교양과 사회주의 교양 영역에 해당된다.

북한에서 발행된 『사회주의 교육학』에서는 혁명 교양과 사회주의 교양을 사회주의 신념, 계급,²¹ 집단주의, 노동, 사회주의 애국주의, 국제주의, 사회주의적 준법 사상, 사

회주의 도덕 교양으로 구분하여 <표 3-3>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교육도서출판사, 1991).

<표 3-3> 혁명 교양과 사회주의 교양에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것

교양 분야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것
사회주의 신념 교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식 사회주의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하는 것 • 미래를 생각하는 인생관으로 살고 투쟁하도록 하는 것 • 혁명적 낙관주의로 무장시키는 것
계급 교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명적 계급의식과 투철한 대적 관념을 갖도록 하는 것 • 미일 제국주의자와 계급적 원수를 미워하고 비타협적으로 싸우는 것 • 비사회주의적 사상요소에 반대하고 투쟁하도록 하는 것 •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혁명적 관점과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
집단주의 교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과 집단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하는 것 •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게 하는 것 • 조직과 집단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 • 사회와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해 몸 바쳐 투쟁하도록 하는 것 •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반대하고 적극 투쟁하도록 하는 것
노동 교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와 집단을 위한 노동은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인식하는 것 • 직업에 대한 교양과 애착을 갖도록 하는 것 • 사회와 인민을 위한 노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것 • 일하기 싫고 놀고 먹으려는 사상과 경향에 반대하고 투쟁하게 하는 것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국애를 강화하는 것 • 인민대중 중심 사회주의의 절대적 우월성에 확신을 갖게 하는 것 • 조선 민족 제일주의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것 • 학생들이 국가사회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하는 것 • 국가보위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것 •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인륜 도덕 교양과 결부시키는 것 • 수령의 유훈을 받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투쟁하도록 하는 것
국제주의 교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성 옹호 및 모든 나라 인민들과 친선 단결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 • 세계의 자주화를 위해 싸우도록 하는 것 •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에 배치되는 사상을 반대, 투쟁하도록 하는 것
사회주의적 준법 사상 교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법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 세워주는 것 • 사회주의법 존중, 법 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생활하는 것을 습관화하도록 하는 것 • 위법 현상에 강하게 투쟁하도록 하는 것
사회주의 도덕 교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도덕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세워주는 것 • 사회주의 도덕 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것 • 고상한 도덕 품성을 지니도록 하는 것 •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요구대로 생활하도록 하는 것 • 낡은 도덕 관념과 생활 인습에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하는 것

자료: 교육도서출판사, 『사회주의 교육학: 사범대학용』, 1991. pp.49~77을 재구성.

21 북한에서 계급은 국가 주권과 생산 수단을 가졌는지에 따라 구별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교육도서출판사, 2013, p.106).

2. 북한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의 경제교육 내용

북한은 취학 전 교육(유치원 1년), 초등교육(소학교 5년), 중등교육(초급중학교 3년 + 고급중학교 3년)으로 구성된 12년제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데 의무 교육 기간에 가르치는 교과목 중에 사회와 경제 교과목은 없다. 대신 사회주의 도덕 교과목에서 정치사상 교양의 한 부분으로 경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사상 교양은 사회주의 혁명에 적합한 시민, 북한 구조에 적합한 인간을 기르기 위해 북한에서 가장 중시하는 과목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를 포함하는 교과목이다. 교육 내용은 사회주의 신념과 문화를 지닌 노동자 양성을 목적에 두고 사회주의 건설에 봉사하는 경제체제, 노동과 직업을 중요시하는 생산 경제, 절약에 중점을 둔 소비 경제를 다루고 있다. 해당 교과는 사회주의 혁명 이데올로기 정치사상 교육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경제 개념에 대한 설명은 매우 적은 분량이 배정되어 있다.

가. 소학교 사회주의 도덕

북한 소학교의 경제 관련 단원은 사회주의 도덕 4학년에 <우리들의 원쑤>, 5학년에 <생산과 절약>이 있다. <우리들의 원쑤>는 ‘두 발 가진 승냥이’, ‘잇을 수 없는 원한’이라는 2개 주제를 다룬다. 미군에게 폭행당한 구두땀이 소년의 이야기(두 발 가진 승냥이)와 일제 치하에서 공사장에 끌려가 학살당한 조선 사람 이야기(잇을 수 없는 원한)를 통해 열악한 남한 경제와 미군의 폭력성, 일제 강점기의 일본의 만행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복수심을 자극하여 타협하지 않고 싸워야 한다는 계급 교양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한다(교육도서출판사, 2016).

소학교 5학년 제4과 <생산과 절약> 단원은 ‘필요한 것이 많아요’,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껴쓰자요’ 등 3개 주제를 통해 재화와 생산의 개념, 직업과 절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필요한 것이 많아요’에서는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재부), 생산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생산품을 공부, 식생활, 문화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분류해 보고, 공장과 농장 사진에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내는 생산 현장을 찾아보도록 하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서는 직업은 무엇이며,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 지 생각해 보도록 하여 모든 직업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 주제에서는 “사회주의

<표 3-4> 북한 소학교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의 경제 관련 단원

학년	경제 관련 단원	교양 분야
소학교 4학년	제10과. 우리들의 원수	계급 교양
	▸ 두발 가진 승냥이	
	▸ 잊을 수 없는 원한	
소학교 5학년	제4과. 생산과 절약	사회주의 도덕 교양
	▸ 필요한 것이 많아요	
	▸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노동 교양
	▸ 아껴쓰자요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자료: 교육도서출판사, 『사회주의 도덕, 소학교 4학년』, 2015a; 교육도서출판사, 『사회주의 도덕, 소학교 5학년』, 2016.

사회에서 직업은 사회와 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위한 사회적 분공(사회적으로 일을 나누어 맡는 것)이며, 무슨 일이나 나라와 인민을 위한 사업,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업이다”라는 김정일의 교시를 중심으로 토론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아껴쓰자요’는 연필 한 자루를 만들려면 30가지가 넘는 원료들이 60여 공정의 생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글을 통해 절약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도서출판사, 2016).

나. 초급중학교 사회주의 도덕

경제 관련 단원은 2학년의 <로동의 보람>과 <증오는 원수에게>, 3학년의 <언제나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와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켜>이다. <로동의 보람> 단원은 세상의 모든 재부와 사람들의 행복은 노동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은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어려서부터 일하기를 즐겨하는 품성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모든 재부와 행복은 노동으로부터’, ‘어려서부터 일하기 좋아하는 버릇을’, ‘로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등 3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재부와 행복은 노동으로부터’는 게으른 네 아들이 과수원에 귀한 보물을 묻어 놓았다는 아버지의 유언을 믿고 열심히 땅을 파헤친 후 아버지가 말한 보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노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재부를 만들어 내는 활동으로 노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집단에 대한 비도덕적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일하기 좋아하는 버릇을’은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다가 생일 잔치상에 오른 돼지 이야기와 일요일 마을 꾸리기에 참여해 칭찬받은 순정이

이야기이다. 어려서부터 일하기 좋아하는 버릇을 키우는 것은 노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며, 자신을 육체적·정신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로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는 일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고, 모든 노동에 성실히 참가하며,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라고 지도하고 있다(교육도서출판사, 2014a).

<중요는 원쑤에게> 단원은 사회주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와 착취 제도를 미워하고 계급적 원수(계급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원수)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단원은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쑤놈들’,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피의 교훈’, ‘언제나 불타는 증오심을 지니고’ 등 3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쑤놈들’은 미·일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그리고 북한 내부에 숨어있는 계급적 원수들을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로 규정하고, 이들이 북한 인민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피의 교훈’에서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들에 대해서는 작은 환상도 가지지 말고 오직 맞서 싸워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언제나 불타는 증오심을 지니고’는 원수들이 저지른 만행을 절대로 잊지 말고 언제나 경각심을 높여 복수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교육도서출판사, 2014a).

초급중학교 3학년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의 <언제나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는 자신보다 집단을 먼저 귀중히 여기며, 집단을 위하는 집단주의 교양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노력을 설명한다. 이 단원은 ‘집단의 이익을 첫 자리에’, ‘집단을 위하여 생활해 나갈 때’, ‘언제나 집단주의 정신으로’ 등 3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집단의 이익을 첫 자리에’는 건설 현장에 일꾼으로 참여하거나 군입대하는 이야기를 통해 집단의 이익과 힘을 중시하고 그에 의거해 하는 모든 일과 공동 노동에 성실히 참가하고, 공동 재부를 귀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집단을 위하여 생활해 나갈 때’에서는 성적이 낮은 학급 친구의 공부를 스스로 도와 학급 성적을 올리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보다 집단을 더 귀중히 여기고 집단을 위해 생활해 나갈 때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 집단주의 정신으로’에서는 힘을 합치지 못해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세 명의 포수 이야기를 들며 집단이나 조직 생활에 참가하기 싫어하는 친구에게 집단의 이익을 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려면 개인 이기주의를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교육도서출판사, 2014b).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켜> 는 나라마다 각기 다른 사회제도 중에서 수령을 어버이로 모시는 북한식 사회주의가 제일이며, 인민이 주인이 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근로자만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단원은 ‘하나의 대가정’, ‘사회주의는 우리의 생명’, ‘총대로 굳건히 지키리’,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등 4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대가정’은 탄광촌 수해 복구 모습과 상업관리소 직원들이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본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북한식 사회주의는 수령을 어버이로 모시고 서로 믿고 돕고 하나의 대가정으로, 사람보다 돈을 더 귀중히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우리의 생명’에서는 1990년대 동유럽 국가의 체제 전환과 남한의 ‘세월호’ 침몰 사건을 다룬다. 사회주의를 잃으면 착취

<표 3-5> 북한 초급중학교 사회주의 도덕 교과서의 경제 관련 단원

학년	경제 관련 단원	영역
초급 중학교 2학년	5. 로동과 보람	노동 교양
	5-1. 모든 재부와 행복은 로동으로부터	
	5-2. 어려서부터 일하기 좋아하는 버릇을	
	5-3. 로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계급 교양
	6. 증오는 원수에게	
	6-1.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놈들	
6-2.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피의 교훈		
6-3. 언제나 불타는 증오심을 지니고		
초급 중학교 3학년	5. 언제나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집단주의 교양
	5-1. 집단의 리익을 첫 자리에	
	5-2. 집단을 위하여 생활해 나갈 때	
	5-3. 언제나 집단주의 정신으로	사회주의 신념 교양
	7.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켜	
	7-1 하나의 대가정	
	7-2. 사회주의는 우리의 생명	
	7-3. 총대로 굳건히 지키리	계급 교양
7-4.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자료: 교육도서출판사, 『사회주의 도덕, 초급중학교2』, 2014a; 교육도서출판사, 『사회주의 도덕, 초급중학교3』, 2014b.

계급이 국가 주권을 쥐고 인민들을 지배하며 억압하게 되고, 온갖 사회악이 넘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수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총대로 굳건히 지키리’는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과 1990년대 말의 서해교전을 예로 들어 인민군대에 나가 총을 잡고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조국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에서는 CD나 USB를 통해 들어온 제국주의 영화를 보는 것은 자본주의 생활양식을 끌어들이는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이며, 북한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게 법적 투쟁을 벌여 사회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교육도서출판사, 2014b).

다. 고급중학교 사회주의 도덕과 법

고급중학교 사회주의 도덕과 법 교과서에서 다루는 경제 관련 내용은 1, 2, 3학년 에 모두 나오고 있다. 1학년 교과서 제4장 <투철한 반제 계급의식을 지니자> 단원에서는 사회주의 도덕 품성을 지닌 참다운 인간, 혁명가가 되려면 자기 계급을 사랑하고 함께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을 해치려는 원수들과 치열한 계급 투쟁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4장은 1절 ‘우리 생활과 계급투쟁’, 2절 ‘우리의 원수들과는 반드시 끝장을 보아야 한다’, 3절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을 철저히 짓부시자’ 등 3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생활과 계급투쟁’에서 미 제국주의는 우리가 잘사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우월한 북한식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기 위해 정치군사적, 경제적 압살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시련과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학생들의 계급의식을 흐리고, 자본주의 사상문화를 침투시키기 위해 악랄하고 교활하게 책동하는 원수들에게 적개심을 품고 투철한 반제 계급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설명한다(교육도서출판사, 2013).

‘우리의 원수들과는 반드시 끝장을 보아야 한다’에서는 제국주의의 본성은 침략적이고 약탈적인 것이며 그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과거 지주나 자본가의 자손들이 사회주의 제도를 해치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조리 소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교육도서출판사, 2013).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을 철저히 짓부시자’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이 반제국주의 자주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사상문화적 침투를 강행하는 것은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방송, 출판물 등을 통해 침투하는 부르주아 문화에 오염되면

<표 3-6> 북한 고급중학교 사회주의 도덕과 법 교과서의 경제 관련 단원

학년	경제 관련 단원	영역
고급 중학교 1학년	제4장. 투철한 반제 계급의식을 지니자	계급 교양
	1절. 우리 생활과 계급투쟁	
	2절. 우리의 원수들과는 반드시 끝장을 보아야 한다	
	3절.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을 철저히 짓부시자	
고급 중학교 2학년	제2장 3절. 사회주의 도덕은 경제생활에서도	사회주의 도덕 교양
	2-3-1. 경제생활이란 무엇인가	
	2-3-2. 경제생활을 건전하게 해 나가자	집단주의, 사회주의 도덕, 애국주의 교양
	제3장 3절.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관리 질서 위반 행위	사회주의적 준법 사상 교양
고급 중학교 3학년	제3장 6절. 사회공동생활 질서 위반 행위의 중요 형태	사회주의적 준법 사상 교양
	제3장 5절. 직업과 명예	노동에 대한 교양
	제4장 2절. 노동은 국민의 영예이며 신성한 의무	노동, 사회주의 준법사상 교양

자료: 교육도서출판사, 『사회주의 도덕과 법, 고급중학교1』, 2013; 교육도서출판사, 『사회주의 도덕과 법, 고급중학교2』, 2014c; 교육도서출판사, 『사회주의 도덕과 법, 고급중학교3』, 2015b.

조국과 인민 집단보다 개인의 안일과 편안만을 바라게 되기 때문에 경각성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언비어와 불순 녹화물을 단호히 물리쳐야 하며, 새것을 좋아하는 북한 청년 학생들의 심리를 노리고 출처가 불명확한 노래를 유포시키는 등의 책동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교육도서출판사, 2013).

고급중학교 2학년에서는 제2장 3절 ‘사회주의 도덕은 경제생활에서도’, 제3장 3절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관리 질서 위반 행위’ 그리고 제3장 6절 ‘사회공동생활 질서 위반 행위의 중요 형태’ 중 노력착취 행위와 고리대 행위에 대한 설명이 경제와 연관된 내용이다. 제2장의 3절은 ‘경제생활이란 무엇인가’, ‘경제생활을 건전하게 해 나가자’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생활이란 무엇인가’에서는 경제생활을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노동 생활과, 분배하고 소비하는 물질 생활로 구분해 설명하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경제생활은 사람의 물질적 요구를 실현하는 생활 분야로 이러한 요구는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데 필요한 물질적 재부를 생산, 분배, 교환, 소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경제생활은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노동 생활과 창조된 재부를 소비하며 살아가는 물질 생활을 포괄한다.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노동 생활이다. 노동 생활은 자연을 개조하여 물질적 부를 창조하

는 사람의 활동으로 물질적 부의 창조를 떠나서 경제생활 자체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노동 생활이 경제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참다운 노동 생활은 인민대중이 생산 수단의 주인이 된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생산 수단을 쥐지 못하여 일자리도 없이 노예 노동을 강요당하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전체 인민이 생산 수단의 주인으로 누구나 노동할 권리를 가지고 안정된 일자리에서 훌륭한 노동 조건을 보장받으면서 노동 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고 있다.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물질 생활이다. 물질 생활은 물질적 부를 분배하고 교환하며 소비하는 생활을 포괄한다. 참다운 물질 생활 역시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참답게 실현된다. 착취와 약탈이 법적으로 규제되고 모든 것이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민 대중이 자기의 노동으로 물질적 부를 창조하면서도 유족하고 평등한 물질 생활을 향유할 수 없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노동의 결과에 따라 분배받고 당과 국가의 시책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비록 유족하지는 못해도 모든 사람들이 고르고 행복한 사회를 누리고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인민들의 물질 생활이 높아지고 있다.”(교육도서출판사, 2013, p.66-68)

또한 노동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설명하면서 학생도 노동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질적 부를 분배하고 교환하고 소비하는 물질 생활에서 청렴결백하고 자기가 사용하는 모든 것을 절약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청렴결백한 사람은 사회 공동 재산을 개인적으로 취하거나 탕진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으며, 자신의 재산보다 사회 공동의 재부를 늘리기 위해 애쓰고, 남의 재산에 함부로 손대지 않고 물건을 훔치는 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긴다고 가르치고 있다. 또한 물건을 가지고 헐잡하지 않으며 돈과 물건밖에 모르는 사람을 너절한 사람으로 본다고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남의 재산을 탐내거나 공짜와 남다른 대우를 바라지 말아야 하며, 남들보다 특별한 물건을 쓰고 색다른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교육도서출판사, 2014c). 절약은 곧 생산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제3장 3절 ‘국가 및 사회협동 단체 재산관리 질서 위반 행위’에서는 교과서에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 관리 질서의 법 위반 행위를 수록하여 어릴 때부터 국가 및 협

동단체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북한 인민들의 법적, 도덕적 의무로 가르치고 있다. 제3장 6절 ‘사회공동생활 질서 위반 행위’에서는 돈이나 물품을 주고 개인적인 일을 시키거나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비사회주의적 착취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급중학교 3학년에서는 제3장 5절 ‘직업과 명예’, 제4장 2절 ‘로동은 공민의 영예이며 신성한 의무’가 경제와 연관된 내용이다. ‘직업과 영예’에서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가져야 하는 직업 의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 직업은 개인이 아닌 사회와 인민을 위해 사회의 일정한 부문을 맡는 것으로 어떤 직업이든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개인이 아닌 사회와 집단을 위해 성실히 일하면 사회와 집단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며 그것이 바로 영예라고 설명하고 있다.

‘로동은 공민의 영예이며 신성한 의무’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 노동법에서는 16세부터 남자는 60살, 여자는 55살까지 노동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노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파견된 직장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1개월 이상 직장에 나가지 않는 등 노동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교육도서출판사, 2015b).

라. 북한 학교 경제교육의 특징

경제학은 인간의 경제활동에 기초를 둔 사회질서와 개인과 집단의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며, 경제교육은 그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체제가 다른 북한과 남한은 경제교육 내용도 차이가 있다.

첫째, 북한의 교육에는 경제의 기본 원리와 시장경제 이해에 필요한 경제이론 체계가 없다. 북한에서 생산과 분배는 시장이 아닌 국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품의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메커니즘이 아닌 국가가 정하고 있다. 경기 변동이나 실업, 인플레이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로만 언급될 뿐이다. 북한에서 시장은 계획경제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제도상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 소유제도와 계획경제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북한의 교육에는 금융 부문이 없다. 사회주의 소유제도하의 북한에서 모든 은행은 국가 소유이며, 제도적으로 민간 자본의 축적을 허용하지 않아 금융 경제가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개인에게 돈을 꾸어주거나 물건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행위를 고리대 행위로 규정하고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는 악랄한 착취 행위로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엄중한 범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

셋째, 북한에서는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제 간 교류에 필요한 개념을 가르치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합리화를 위하여 남한 등의 대외지향적 개방 정책, 즉 외국과의 경제 교류, 기술 이전, 합작 투자 등에 대해 침략 경제, 약탈 경제, 예속 경제로 철저히 비판하고 있다.

넷째, 노동을 신성시하여 교육과정 편성 시 필수화하고 노동 규범과 태도 규율의 형성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 생활이며, 노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집단에 대한 비도덕적인 행동이므로 어려서부터 노동을 사랑하고 일하기 좋아하는 품성을 키워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다섯째, 근검절약을 강조하고 낭비적 요소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둔 소비 의식 교육을 하고 있다. 이는 국가 조직 관리의 비능률과 주인 의식의 불명확으로 물자가 낭비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자본주의 체제를 적대시하고 계급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남한의 교과서는 각 경제체제의 특징과 문제점 위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 북한 교과서는 자본주의적 사고나 행동 그리고 대상을 철저히 비판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우수성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기술되어 있다.

일곱째, 생산 수단을 국가나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개인보다 집단의 가치를 강조한다. 모든 생산 수단을 국가나 협동단체에서 소유하고 공동으로 생산해 분배하는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집단주의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인보다는 집단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3. 대한민국의 학교 경제교육

한국 경제 교과는 학생들이 체계적인 경제 지식과 사고력 및 가치관을 바탕으로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합리적이며 책임성 있게 경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표 3-7> 사회과 교과와 경제 교과 내용 요소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3~4학년	5~6학년	1~3학년	통합사회
경제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희소성 · 경제활동 · 합리적 선택 · 생산과 소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와 기업의 역할 · 근로자의 권리 ·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선택 · 경제생활과 금융 생활 · 기업의 역할과 기업가 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제와 합리적 선택 · 경제 주체의 역할 · 금융 생활
시장 경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사례와 특징 · 수요와 공급, 시장 가격의 결정 · 시장 가격의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기능의 한계
국가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교류 · 상호 의존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의 효과 · 경제성장과 관련된 문제 해결 · 무역의 의미 · 무역의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과 국내총생산 · 물가 변동과 실업 · 국제 거래와 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분업과 무역

자료: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교시 제2022-33호[별책 7], 2022. 12. 22, p.14, p.115.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경제학의 기본 원리와 이론 체계를 이해하고, 현실의 경제 문제를 사회 현상의 전체적 맥락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준과 방법을 모색하며, 경제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탐색한다(교육부, 2022. 12. 22).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경제 과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으로 모든 학생이 배우지는 않는다. 모든 학생이 배우는 경제 관련 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 교과서와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다루어진다.²² 경제교육의 내용은 경제생활 부문, 시장경제 부문, 국가 경제 부문으로 구분되며, 교과 내용은 경제적 지식과 개념의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 초등학교 사회 교과와 경제교육

초등학교 사회 교과에서의 경제 관련 내용은 3~4학년군과 4~5학년군에서 다루고 있다. 3~4학년군에서는 경제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와 합리적 선택의

²² 사회과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 인간과 사회 현상을 탐구하고 지역 사회, 국가, 세계에서의 생활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어 개인의 성장과 지역 사회·국가·세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시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부, 2022. 12. 22).

<표 3-8> 초등학교 사회 교과와 경제 단원별 성취 기준

단원명	성취 기준
<3~4학년군> 경제활동과 지역 간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경제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이해하고, 경제활동에서 합리적 선택의 방법을 탐색한다. · 생산과 소비 활동 파악, 인적·물적 교류 사례를 통해 각 지역 및 사람들이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음을 탐색한다.
<5~6학년군> 시장경제와 국가 간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제에서 가계와 기업의 역할을 이해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기업의 자유 및 사회적 책임을 탐색한다. · 경제성장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빠른 경제성장으로 발생한 문제 해결 방안 탐색한다. · 사례를 통해 무역의 의미를 이해하고, 국가 간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탐구한다.

자료: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교시 제2022-33호[별책 7], 2022. 12. 22, p.25, p.37.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술되어 있다. 자원의 희소성을 이해하고 경제활동에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 방법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 지역의 경제활동이 다른 지역과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5~6학년군에서는 시장경제에서 가계와 기업의 역할, 근로자의 권리, 기업의 자유 및 사회적 책임을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시장경제의 특징, 가계와 기업의 역할 및 상호 의존 관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 기업의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이 중요함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빠른 경제성장으로 발생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사례를 통해 무역의 의미와 국가 간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탐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여러 나라가 무역을 통해 경쟁 및 상호 의존 관계에 있음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2022. 12. 22).

나. 중학교 사회 교과와 경제교육

중학교 과정에서는 경제생활, 시장경제, 국가 경제 부문을 다루고 있다. 경제생활 부문은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 이외에 기업가 정신, 금융 생활과 자산 및 신용 관리 방안이 추가된다. 특히 가계의 입장에서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경제생활을 소비와 금융 생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산 관리, 신용 관리 등 금융 생활 측면에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금융 생활을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경제 부문은 시장의 의미와 필요성, 가격과 수요량, 공급량의 관계를 파악하고

<표 3-9> 중학교 사회 교과의 경제 단원별 성취 기준

단원명	성취 기준
경제생활과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생활에서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비용-편익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 방안을 탐색한다.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경제생활을 분석하고,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자산 및 신용 관리 방안을 계획한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설명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업가 정신에 대해 토의한다.
시장과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시장 사례를 조사하고, 시장의 의미와 필요성 설명한다. 수요·공급 법칙을 사례를 통해 도출하고,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설명한다. 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 변화 요인을 조사하고, 시장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방안을 계획한다.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후 모습을 검토하고, 국내총생산 증가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의한다. 물가 변동과 실업의 사례를 탐색하고, 물가 변동과 실업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세계화 시대에 국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를 탐색하고, 환율 변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자료: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교시 제2022-33호[별책 7], 2022. 12. 22, pp.62-65.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통해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들 요인이 어떻게 시장 가격을 변화시키는지 설명하고 있다.

국가 경제 부문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물가 변동과 실업의 사례 탐색, 물가 변동과 실업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환율 변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총생산 지표를 설명하고 최근 세계화 흐름 속에서 재화와 서비스, 자본과 노동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22. 12. 22).

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의 경제교육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합리적 선택, 시장과 정부 관계, 경제 주체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금융 자산의 특징과 자산 관리 원칙을 토대로 한 금융 생활 설계,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역사적 사건이나 사상가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 선택의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시장 실패와

<표 3-10>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과의 경제 단원별 성취 기준

단원명	성취 기준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비교 평가한다. ·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를 파악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에 관해 탐구한다. · 금융 자산의 특징과 자산 관리 원칙을 토대로 금융 생활을 설계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가 금융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 자원, 노동, 자본의 지역 분포에 따른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국제 무역의 방안을 탐색한다.

자료: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교시 제2022-33회[별책 7], 2022. 12. 22, p.118.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의 역할·책임과 함께 기업이 정신, 노동자의 권익, 윤리적 소비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금융 자산으로 예금, 채권, 주식 등과 자산 관리 원칙으로 수익성, 유동성, 안전성을 설명한다. 또한 자원, 노동, 자본 등의 지역적 분포의 차이 및 이에 따른 생산비의 차이로 국제 분업 및 무역이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교육부, 2022. 12. 22).

라. 고등학교 경제 교과과의 경제교육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경제는 경제학과 경제 문제,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 경제 등 4개 단원으로 구성된다. 교육부가 제시한 고등학교 경제 과목의 단원별 성취 기준을 보면 <표 3-11>과 같다(교육부, 2022. 12. 22).

경제학과 경제 문제 단원은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과 경제학이 다양한 경제적 선택 행위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이해하기 위한 단원이다. 이를 위해 전통 경제, 계획경제, 시장경제 등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각각의 경제 제도가 가지는 장단점을 비교하고, 경제 주체들의 자유와 경쟁을 바탕으로 가격 기구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파악한다. 그리고 긍정적·부정적 유인의 다양한 사례를 탐구하고,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능력과 한계 분석을 이용한 의사결정 능력을 계발하도록 하고 있다.

미시경제 단원은 수요와 공급을 통한 시장 균형 가격 및 거래량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상품 시장뿐 아니라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 다양한 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장 기능뿐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활동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표 3-11> 고등학교 경제 교과의 단원별 성취 기준

단원명	성취 기준
경제학과 경제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 생활에서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학의 분석 대상과 성격을 이해한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파악한다.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하고,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능력과 한계 분석을 이용한 의사결정 능력을 계발한다.
미시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균형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파악하고, 이를 다양한 시장에 적용한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하고, 조세, 공공재 등과 같이 시장의 자원 배분에 개입하는 사례를 탐구한다. 시장 기능과 공공 부문의 활동을 비교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거시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를 탐색하고, 국가 경제 전반의 활동 수준을 파악한다. 경제성장의 의미와 요인 이해하고, 한국 경제의 변화와 경제적 성과를 균형 있는 시각에서 평가한다. 경기 변동의 의미와 요인을 이해하고, 경기 안정화 방안으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분석한다.
국제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된 국제 사회에서 국제 거래를 파악하고,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역을 중심으로 무역 원리를 이해하고,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한다. 외환 시장에서 환율의 결정 원리를 이해하고, 환율 변동이 국가 경제와 개인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자료: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교시 제2022-33호[별책 7], 2022. 12. 22, pp.232-236.

조세 부과, 소득 재분배, 공공재 생산, 경쟁 제한 규제 및 공정 거래 확립 등 정부의 주요 활동도 다루고 있다. 또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및 그에 따른 대책도 탐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시경제 단원은 국내총생산, 물가상승률, 실업률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의 활동 수준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경기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경제 안정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 경제 단원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 요소 등의 국가 간 거래 필요성과 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역의 이득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환율의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율 변동이 국가 경제와 개인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도록 하고 있다.

제4장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제1절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도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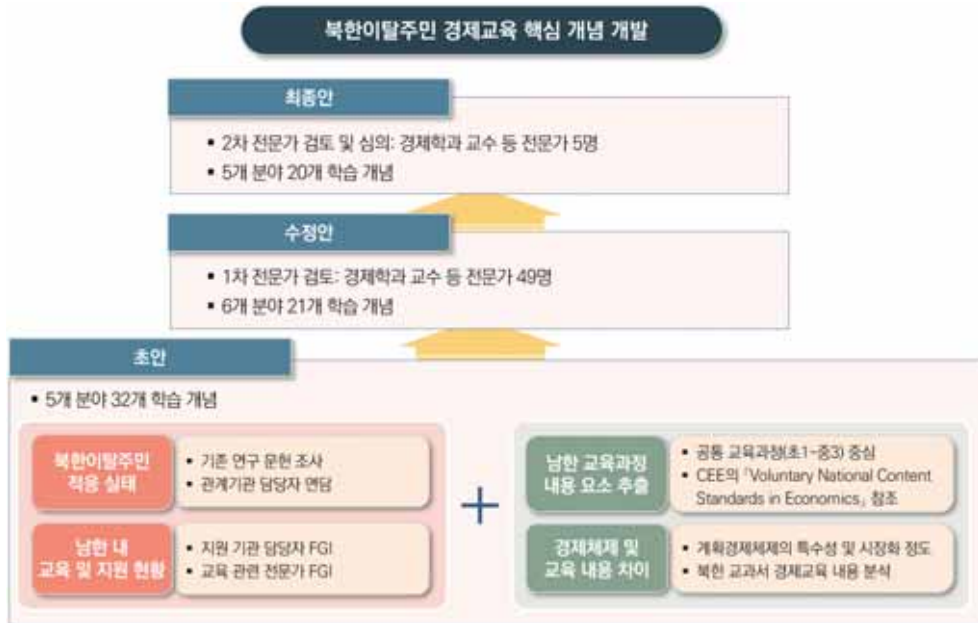
1.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초안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개발을 위해 남북한의 경제교육 내용 비교, 북한이탈주민 적응 현황 관련 문헌 분석, 북한이탈주민 경제 이해력 관련 조사 분석, 북한이탈주민 지원 담당자 및 교육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북한의 경제체제 및 교육 과정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시장경제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했다. 특히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는 경제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이 부족해 이를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북한이탈주민 학습자가 경제교육을 통해 다음의 세 가지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고려하여 핵심 개념을 도출했다. 첫째,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와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의 본질적 차이를 이해한다. 둘째, 일상의 경제 문제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실생활에서 경제적 의사결정 역량을 함양한다. 셋째, 남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이를 고려해 5개 영역, 32개 학습 개념으로 구성된 핵심 개념 초안을 작성했다.

학습 수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 공통 교육과정(초1~중3)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한국의 학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 수준으로 남한의 공교육이 제공하는 기본 교육과정인 공통

[그림 4-1]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개발 과정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핵심 개념 초안을 작성했다. 추가로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 중 경제 영역의 내용 체계와 경제교육 학습 개념 개발 시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미국 경제교육협의회(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CEE)의 *Voluntary 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의 20개 기본 경제 개념과 『맨큐의 경제학』의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를 참고했다. 또한 각 학습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보조 개념을 추출해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초안을 작성했다.

핵심 개념의 첫 번째 영역은 ‘기본개념 이해’이다. 이 영역에는 기본적인 경제원리와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인 ‘자원의 희소성,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 생산 요소, 경제적 유인, 의사결정, 3가지 기본 경제 문제, 생산과 소비 자원의 분배’가 포함된다. 학습 개념 중 자원의 희소성, 합리적 선택, 생산, 기회비용은 공통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개념이다. CEE의 기본 경제 개념에 해당하는 의사결정과 경제적 유인, 사무엘슨(P. A. Samuelson)이 제시한 3가지 기본 경제 문제는 경제체제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므로 추가했다.

두 번째 영역인 ‘시장경제 이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시장경제체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 개념을 선정했다. ‘시장,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제도, 가계의 역할, 기업의 역할, 정부의 역할, 시장 가격의 결정, 시장 가격의 변동,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등 9개 개념이다. 시장, 가계·기업·정부의 역할, 시장 가격의 결정 및 변동은 공통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개념이며, CEE의 기본 경제 개념 중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제도를 추가해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했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는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경제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시장과 정부의 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포함했다.

세 번째는 ‘국가 경제 이해’ 영역이다. 국가 경제는 사회주의 대가정체제인 북한에서는 다루지 않는 개념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국가 경제 환경을 이해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 국내총생산, 물가 변동, 경기 순환, 실업’ 등 5가지의 학습 개념을 구성했다. 경제성장, 국내총생산, 물가 변동과 실업은 공통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학습 개념이다. 경기 순환은 고등학교 경제 과목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경제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개념이라 판단해 핵심 개념에 추가했다.

네 번째 영역은 ‘개방 경제 이해’이다. 폐쇄 경제인 북한의 교역은 당의 주도하에 주로 중국, 러시아와 이뤄지며 품목도 극히 제한적이다. 한국의 개방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경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방 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으로의 자금 송금을 위해 환율 변화에 민감하다는 것도 핵심 개념 선정의 이유가 되었다. 따라서 ‘무역의 필요성,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환율 변동’을 이 영역의 핵심 개념으로 구성했다. 위 세 가지 핵심 개념은 모두 공통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다섯 번째는 ‘금융 이해’ 영역으로, 이에 대한 교육이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짐에 따라 현행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에서도 비중이 높은 편이다.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의사결정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통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금융 관련 개념에, 경제 이해력 및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 일반 국민보다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개념을 추가해 핵심 개념을 선정했다. 핵심 개념은 ‘화폐의 기능, 이자율, 소득, 금융 기관과 금융 상품, 자산 관리, 신용 관리, 금융 생활 설계’ 등 7개이다.

<표 4-1>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초안

영역	학습 개념	보조 개념
기본개념 이해	자원의 희소성	경제적 욕구, 재화와 서비스, 생산, 소비, 분배
	합리적 선택	비용, 편익
	기회비용	경제학에서의 비용
	생산 요소	천연자원, 인적 자원, 자본재, 인적 자본
	경제적 유인	긍정적, 부정적 유인과 반응
	의사결정	한계적 의사결정, 한계 이익, 한계 비용
	3가지 기본 경제 문제	
	생산과 소비 자원의 분배	시장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혼합경제체제
시장경제 이해	시장	시장의 의미와 시장의 유형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제도	사유 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공정한 경쟁
	가계의 역할	소비자, 근로자의 권리와 책임
	기업의 역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가 정신
	정부의 역할	공공재, 세입과 세출
	시장 가격의 결정	수요 법칙, 공급 법칙, 균형 가격, 상대 가격
	시장 가격의 변동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
	시장 실패	합리적 선택의 한계, 공공재 특성
국가 경제 이해	정부 실패	정부 실패의 원인
	경제성장	긍정적·부정적 영향, 급속한 성장의 문제점
	국내총생산(GDP)	1인당 GDP, 국내총생산의 한계
	물가 변동	가격, 물가,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경기 순환	경기 침체
개방 경제 이해	실업	실업의 영향
	무역의 필요성	국제 분업, 수출, 수입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무역 장벽
금융 이해	환율 변동	외환 시장
	화폐의 기능	가치 저장 수단, 거래 척도, 교환 수단
	이자율	실질, 명목, 단리, 복리
	소득	임금, 소득, 노동
	금융 기관과 금융 상품	예금, 채권, 주식, 보험, 연금
	자산 관리	수익성, 유동성, 안전성
	신용 관리	신용회복지원제도
금융 생활 설계	생애주기, 재무 설계	

2.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수정안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초안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위해 1차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1차 전문가 의견조사는 경제학·사회교육학 교수 중 경제교육 활동 참여자와 학회 회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나 교육을 진행하는 교수를 대상으로 수행했다. 의견조사는 ①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의 영역별 학습 개념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검토, ② 학습 개념별 보조 개념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③ 총평으로 이루어졌다. 학습 개념 또는 보조 개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작성하도록 했고, 추가할 개념과 그 이유에 대한 작성도 요청했다. 조사는 2024년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했으며, 조사 대상 전문가 50명 중 49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초안의 32개의 학습 개념 중 17개에 대해 전문가 45명 이상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핵심 개념 중 ‘생산 요소, 의사결정, 3가지 기본 경제 문제, 생산과 소비 자원의 분배, 소득’은 10명 이상이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른 핵심 개념과 통합해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이거나, 북한이탈주민에게는 필요성이 낮은 학습 개념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때는 공통 교육과정을 학습 수준의 기준으로 설정한 뒤 수정했다. 전문가의 의견이 상반될 때는 공통 교육과정 이상의 학습 수준이더라도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개념, 북한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거나 남한 교육과정과 차이가 있는 개념,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개념은 포함했다. 추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가 제안한 개념은 기존 개념과 연계해 추가했다.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1차 수정을 통해 핵심 개념의 영역은 기존 5개에서 ‘남북한 경제체제 이해, 기초개념 이해, 시장경제 이해, 국가 경제 및 국제 경제 이해, 금융 생활 이해, 현장 실습 및 상담’의 6개로 재편되었다. 남북한 경제체제 차이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남북한 경제체제 이해’ 영역을 추가한 결과이다. 다수의 전문가는 북한에서 받은 교육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한국 경제 발전사, 남북한 경제체제의 차이점’을 학습 개념으로 하는 영역을 추가하고, 남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학습할 것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앞부분에 배치했다.

‘기본개념 이해’ 영역은 가장 많이 수정되었다. 기존 학습 개념 중 ‘자원의 희소성,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 의사결정’을 ‘합리적 선택’으로 통합해 세부적인 학문으로서 개념을 이해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강조하고자 했다. ‘시장경제 이해’ 영역도 초안의 9개 학습 개념에서 4개로 조정했다. 기존 ‘가계·기업·정부의 역할’로 나뉘어졌던 학습 개념을 ‘경제 순환과 경제 주체의 역할’이라는 학습 개념으로 통합하면서 각 경제 주체의 활동으로 경제가 순환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개념을 통합해서 제시하는 것이 학습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시장 가격의 결정, 시장 가격의 변동’을 통합하여 ‘시장 가격의 결정’으로, ‘시장 실패, 정부 실패’를 통합하여 ‘시장 실패와 정부의 개입’으로 수정했다.

‘국가 경제 이해’와 ‘개방 경제 이해’ 영역은 ‘국가 경제 및 국제 경제 이해’로 통합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념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학습 개념 ‘국내총생산’을 ‘경제성장’의 보조 개념으로 조정하고, ‘무역의 필요성,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은 하나의 학습 개념 ‘무역’으로 통합했다. 반면, 경제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개념인 ‘실업’과 ‘환율’에는 ‘실업의 원인과 대책’, ‘환율 변동의 영향’을 각각 보조 개념으로 추가했다.

‘금융 이해’ 영역은 ‘금융 생활 이해’로 수정하고, 안정적인 금융 생활에 필요한 학습 개념을 포함했다. 학습 개념 ‘화폐의 기능’과 ‘이자율’은 ‘화폐와 이자율’로 통합해 이자율 변화에 따른 화폐 가치의 변화를 이해하도록 했다. ‘자산 관리’에 ‘생애주기별 수입과 지출, 자산 형성, 자산 관리의 원칙’을 보조 개념으로 구성해 저축과 투자를 통한 체계적인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용 관리’는 ‘신용과 위험 관리’로 수정해 신용을 관리하는 것과 보험 및 연금을 통한 위험 대비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5가지 영역에 덧붙여 ‘현장 실습 및 상담’ 영역을 추가했다. 이 영역은 전문가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안한 개념 중 현장 실습이나 상담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신용회복제도, 부동산, 세금, 보험, 창업’ 등 원만한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제가 포함되었다.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수정안은 6개 영역, 21개 학습 개념과 47개 보조 개념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은 <표 4-2>와 같다.

<표 4-2>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수정안

영역	학습 개념	보조 개념
I. 남북한 경제체제 이해	한국 경제 발전사	해방 이후 시대별 발전 과정,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 경제 발전의 문제 해결 노력
	남북한 경제체제의 차이점	기본 경제 문제, 시장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혼합경제체제
II. 기초개념 이해	합리적 선택	희소성, 비용과 편익, 기회비용, 의사결정의 기준
III. 시장경제 이해	시장	시장의 의미, 시장의 기능,
	경제 순환과 경제 주체의 역할	경제 순환, 가계의 역할, 기업의 역할, 정부의 역할
	시장 가격의 결정	수요 법칙, 공급 법칙,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의 변동
	시장 실패와 정부의 개입	불완전 경쟁, 외부 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IV. 국가 경제 및 국제 경제 이해	경제성장	GDP/1인당 GDP, 경제성장률, 경기 변동
	물가	가격과 물가,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의 영향
	고용과 실업	실업의 원인과 영향, 실업 대책
	무역	무역의 필요성,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환율	환율의 개념, 환율 변동의 영향
V. 금융 생활 이해	화폐와 이자율	화폐, 이자율(금리)
	자산 관리	생애주기별 수입과 지출, 자산 형성(저축과 투자), 자산 관리의 원칙
	신용과 위험 관리	신용 관리, 보험, 연금
	금융 피해 방지 및 대응책	금융 피해의 유형, 예금자·투자자보호제도
VI. 현장 실습 및 상담	신용회복제도, 부동산, 세금, 보험, 창업	

3.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최종안

수정한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2차 전문가 의견 조사를 진행했다. 2차 전문가 의견조사는 1차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 중 주요한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5명을 선정해 진행했다. 조사 내용은 ① '현장 실습 및 상담'을 제외한 5개 영역과 16개 학습 개념의 적절성: 추가나 제외, 분할이나 병합 의견, ② 47개 보조 개념의 학습 내용: 교재 작성 시 기준이나 참고할 사항, ③ '현장 실습 및 상담' 영역 내용의 적절성: 추가나 제외 의견, ④ 전체적인 총평(보완 또는 참고 의견)이다. 의뢰서에는 1차 전문가 의견조사의 주요 내용, 북한이탈주민 적응 실태 및 북한 교육과정 내 경제교육의 특징을 첨부해 참고하도록 했다. 조사는 2024년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었다.

전문가들은 1차 수정안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경제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하는 데 필요한 학습 개념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남북한 경제체제 이해부터 기초개념, 시장경제의 원리, 국가 및 국제 경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지식까지 폭넓게 포함했다는 점과 현장 실습과 상담을 통해 경제 환경 적응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남북한의 경제체제를 비교할 때 시장경제체제나 자본주의를 무조건 긍정적인 것으로, 계획경제체제와 사회주의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2차 수정은 서면으로 진행된 2차 전문가 의견 조사와 대면 자문회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최종안은 2차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을 토대로 연구진과 2차 의견조사에 참여한 전문가가 토론하며 확정했다. 그 결과 기존 6개에서 5개로 영역이 축소되었고, ‘현장 실습 및 상담’ 영역을 제외한 학습 개념이 16개에서 15개로 조정되었다.

최종안에서는 ‘기초 개념 이해’ 영역이 ‘시장경제 이해’ 영역으로 통합되었다. ‘기초 개념 이해’ 영역의 학습 개념인 합리적 선택이 경제를 이해하는 기초 개념이지만, ‘시장경제 이해’ 영역에서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장경제와 함께 이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비합리적 소비나 투자를 피할 수 있도록 학습 개념에 매몰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했으며, 학습 개념 ‘시장 가격의 결정’은 ‘시장 가격의 결정 원리’로 구체화했다. ‘가격이 높으면 품질도 좋을 것이다’ 또는 ‘수입품은 국산품보다 비싸다’ 등 시장 가격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불필요한 소비나 충동 소비, 잘못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시장 가격에 대한 오해’를 보조 개념으로 추가했다. 학습 개념 ‘시장 실패와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효율성과 정부의 개입’으로 수정하여, 자원이 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으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국가 경제 및 국제 경제 이해’ 영역에서는 학습 개념을 구체화하고, 통합하는 조정이 이루어졌다. 기존 학습 개념 ‘경제성장’은 ‘경제성장과 경기 변동’으로 수정해 실질 GDP의 증감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물가’는 ‘물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수정하고, 보조 개념을 ‘물가와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조정해 물가의 개념과 대표적인 물가 지수를 파악한 뒤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편성했다. 학습 개념 ‘고용과 실업’의 보조 개념 중 ‘실업 대책’은

‘정부의 고용 및 실업 대책’으로 수정해 정부가 실업 방지 정책과 더불어 고용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학습 개념 ‘무역’과 ‘환율’을 통합해, 무역이 필요한 이유와 함께 생활과 밀접한 환율의 개념과 변동의 영향을 이해하도록 했다.

‘금융 생활 이해’ 영역에서는 기존 학습 개념인 ‘화폐와 이자율’, ‘자산 관리’를 ‘수입과 지출’, ‘자산 관리’로 재편성했다. ‘수입과 지출’에서는 경제생활을 하며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수입과 지출의 변화를 파악하고,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이자율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했다. 특히 대출 및 저축 시 이자율을 고려해야 하며, 시장의 이자율이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 금리에 의해 변동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경제 상황과 뉴스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자 했다. 기존 ‘금융 피해 방지 및 대응책’의 보조 개념이었던 예금자·투자자보호제도를 학습 개념 ‘자산 관리’의 보조 개념으로 이동시켜 자산 관리를 위한 금융 상품 선택 시 확인해야 하는 제도로서 학습하도록 구성했다.

최종안에서는 ‘현장 실습 및 상담’의 학습 개념 ‘신용회복제도, 부동산, 세금, 보험과 연금, 창업과 폐업’의 보조 개념을 추가했다. 보조 개념은 학습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실습이나 상담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학습 개념 ‘창업과 폐업’은 1차 수정안에서 폐업 관련 내용을 추가한 학습 개념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해 올바른 폐업 절차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법을 추가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최종안은 <표 4-3>과 같다.

<표 4-3>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 최종안

영역	학습 개념	보조 개념
I. 남북한 경제체제 이해	한국 경제 발전사	해방 이후 시대별 발전 과정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와 해결 노력
	남북한 경제체제의 비교	기본 경제 문제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차이
II. 시장경제 이해	합리적 선택	희소성 비용과 편익 기회비용 매물 비용
	시장	시장의 의미 시장의 기능
	경제 순환과 경제 주체의 역할	경제 순환 가계의 역할 기업의 역할 정부의 역할

<표 4-3>의 계속

영역	학습 개념	보조 개념
II. 시장경제 이해	시장 가격의 결정 원리	수요·공급의 법칙 시장 가격의 변동 요인 시장 가격에 대한 오해
	시장의 효율성과 정부의 개입	시장의 효율성 공정 경쟁 보장을 위한 정부 정책 경제적 유인을 통한 효율성 증진 정부의 공공재 공급
III. 국가 경제 및 국제 경제 이해	경제성장과 경기 변동	GDP/1인당 GDP 경제성장률 경기 변동과 정부의 정책
	물가와 인플레이션	물가와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의 영향
	고용과 실업	실업의 원인과 영향 정부의 고용 및 실업 대책
	무역과 환율	무역의 필요성 환율의 개념 환율 변동의 영향
IV. 금융 생활 이해	수입과 지출	이자율(금리) 생애주기별 수입과 지출
	자산 관리	저축과 투자 자산 관리의 원칙 예금자/투자자보호제도
	신용과 위험 관리	신용 관리 보험 연금
	금융 피해 방지 및 대응책	금융 피해의 유형 금융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
V. 현장 실습 및 상담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신용 사용 서약서
	부동산	부동산 거래 절차 임대 계약서 이해 부동산 법률 기초
	세금	세금의 종류와 필요성
	보험과 연금	보험 가입 시 고려할 점 약관 살펴보기 연금의 종류와 필요성
	창업과 폐업	창업·폐업의 방법과 절차 소상공인지원제도

제2절 영역별 학습 개념

1. 남북한 경제체제 이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의 경제체제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북한에서는 당이 가계와 기업의 모든 경제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동시에 가계의 생계를 책임진다. 즉, 일반 주민은 노동과 소비 등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스스로 한 경험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남한에서는 사유 재산이 인정되고 경제활동의 자유가 있으며 소비, 직업, 재무 관리 등 모든 경제적 선택을 개인이 자기 책임하에 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핵심 개념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체제 차이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도록 구성하였다.

가. 한국 경제 발전사

‘한국 경제 발전사’에서는 남한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지 학습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남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왜곡된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남한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시장경제체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과정과, 남한 경제의 성장 원동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 발전사’를 학습하기 위한 보조 개념으로는 해방 이후 시대별 발전 과정,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와 해결 노력을 선정했다.

‘해방 이후 시대별 발전 과정’에서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출 주도형 경제체제 구축, 인재 양성, 중화학 공업 육성, 외환위기 극복,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등 한국이 시대별로 추진한 경제 발전 전략과 그 성과를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다. 같은 시기 북한과 남한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에서는 한국이 가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 노력, 시장경제체제 선택, 기업가 정신, 높은 교육열 등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을 학습한다.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와 해결 노력’에서는 한국이 직면한 소득 불평등, 환경 오염, 저출산 및 고령화, 도시 집중화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주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학습한다.

나. 남북한 경제체제의 비교

남한의 시장경제체제가 북한의 계획경제체제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이해하고, 각 체제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본 경제 문제,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차이를 보조 개념으로 구성했다.

‘기본 경제 문제’에서는 사무엘슨이 제시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의 세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경제체제별로 왜 다른지 탐구하고, 이를 통해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기본적인 차이를 이해한다.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차이’에서는 시장경제가 사유 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사적 이익의 추구를 보장하고 각 경제 주체가 자기 책임하에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학습한다. 반면,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 경제 시스템이 통제되며,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또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혼합경제체제의 특징을 갖는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 4-4> ‘남북한 경제체제 이해’ 영역의 학습 내용

학습 개념	보조 개념	보조 개념의 학습 내용
한국 경제 발전사	해방 이후 시대별 발전 과정	해방 이후 한국이 시대별로 어떤 과정을 거쳐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지 이해한다.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살펴보고, 경제체제의 차이가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파악한다.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와 해결 노력	소득 재분배, 환경 오염, 도시 집중 등 한국이 당면한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주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탐구한다.
남북한 경제체제의 비교	기본 경제 문제	기본적인 경제 문제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를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가 경제체제를 구분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체제별로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지 살펴본다.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차이	시장경제체제는 경제 주체의 자유와 책임, 경쟁을 바탕으로 가격 기구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사유 재산권·경제활동의 자유·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또한 계획경제체제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 경제 시스템이 통제되는 사회이며,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두 체제 간의 장단점을 비교한다.

2. 시장경제 이해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체제가 남한과 다르고, 북한 내에서 시장경제와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특정 지역에 발달한 장마당을 통해 시장을 경험했으나, 이는 협소한 의미의 시장으로 남한에서 형성된 다양한 형태의 시장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했다. 시장경제에서 각 경제 주체의 역할이나 자유와 경쟁 등 시장경제체제의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 합리적 선택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기업과 가계 같은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이 아닌 정부의 계획과 결정에 따라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 또한 정부가 가계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경제생활에서 의사결정을 직접 해본 경험이 적다. 이로 인해 왜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또 기회비용, 매물 비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고,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성은 경제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시장경제체제를 이해하고 합리적 선택의 방법을 학습하기 위한 기초 개념이다. 또한 합리적 선택을 위해 편익과 기회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물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한다.

나. 시장

시장경제체제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의미와 기능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시장을 장마당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재화를 사고파는 소비재 시장과 더불어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 다양한 유형의 시장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장’을 학습 개념으로 선정하고, 시장의 의미와 기능을 보

조 개념으로 구성했다.

북한이탈주민은 좁은 의미의 시장만을 경험한 경우가 많아 남한과 북한에서 의미하는 시장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따라서 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시장의 사례를 토대로 시장의 의미 및 종류의 차이를 비교한다. 시장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시장의 기능을 학습 개념으로 구성했다. 시장은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어 거래 비용을 줄여주며, 교환을 통한 분업과 특화를 촉진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다. 경제 순환과 경제 주체의 역할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체제로 가계, 기업, 정부의 구분이 모호하다. 반면, 시장경제체제는 세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가 순환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서 소비 활동을 통해 가계의 역할을, 생산 활동을 통해 기업의 역할을 경험하고 있다. 자신의 경제활동이 경제 순환에 영향을 주며, 경제 주체들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을 파악하는 것은 시장경제 적응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경제 순환과 경제 주체의 역할’의 보조 개념으로 경제 순환, 가계의 역할, 기업의 역할, 정부의 역할을 편성해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으로 경제가 순환한다는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북한이탈주민은 창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지만 기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보조 개념인 기업의 역할에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학습 내용에 포함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의 대상으로, 이러한 지원이 정부의 역할 중 하나이며 세금이 그 재원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별도의 학습 개념으로 편성했으므로(2-마. 시장 효율성과 정부의 개입), 여기에서는 경제 순환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성했다.

라. 시장 가격의 결정 원리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생산량이 정해지고, 노동 투입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의 결정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정한 국정 가격과 장마당에서 형성되는 시장 가격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반면,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므로 시장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격의 변동이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시장 가격의 결정 원리’를 학습 개념으로 편성했다. 이를 학습하기 위한 보조 개념은 ‘수요·공급의 법칙, 시장 가격 변동 요인, 시장 가격에 대한 오해’로 구성했다.

수요·공급의 법칙과 가격 변동의 원리를 이해하면,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변화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간단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요·공급의 법칙과 가격 변동 요인 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싼 제품은 무조건 좋은 제품이다’, ‘유명 브랜드 제품은 무조건 좋은 제품이다’, ‘부동산은 항상 가격이 오를 것이다’ 등 시장 가격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내용을 다루는 것도 필요하다. 시장 가격의 결정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비합리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보조 개념과 학습 내용을 구성했다.

마. 시장의 효율성과 정부의 개입

시장의 순기능과 동시에, 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부의 역할을 함께 학습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장의 효율성과 더불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시장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학습 개념으로 구성했다. ‘시장의 효율성과 정부의 개입’의 보조 개념은 시장의 효율성, 공정 경쟁 보장을 위한 정부 정책, 경제적 유인을 통한 효율성 증진, 정부의 공공재 공급이다.

<표 4-5> ‘시장경제 이해’ 영역의 학습 내용

학습 개념	보조 개념	보조 개념의 학습 내용
합리적 선택	희소성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경제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이해한다.
	비용과 편익	경제생활에서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일상생활에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 방안을 탐색한다.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대안의 가치를 포함한 비용을 의미하며, 돈뿐 아니라 시간이나 다른 자원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고, 기회비용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고 개인과 사회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이해한다.
	매몰 비용	이미 지출해 되돌릴 수 없는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표 4-5>의 계속

학습 개념	보조 개념	보조 개념의 학습 내용
시장	시장의 의미	남한과 북한의 시장 종류와 개념, 차이를 비교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시장의 사례를 토대로 시장의 의미를 파악한다.
	시장의 기능	거래 비용의 감소, 교환을 통한 분업과 특화의 촉진 등 다양한 시장의 기능을 이해한다.
경제 순환과 경제 주체의 역할	경제 순환	국민 경제란 가계, 기업, 정부 등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가 상호 작용하는 경제 단위이며, 생산·분배·소비가 순환되면서 움직인다는 점을 이해한다.
	가계의 역할	가계는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 기업에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어 세금을 납부하며 소비와 저축을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기업의 역할	기업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가계로부터 제공받은 생산 요소를 이용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생산 요소의 대가(임금/지대/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한다는 것을 깨닫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정부의 역할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바탕으로 도로나 항만 등 사회 간접 자원을 마련하여 국방·교육 등과 같이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시장 가격의 결정 원리	수요·공급의 법칙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하며,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하는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이해한다.
	시장 가격의 변동 요인	소득, 개인의 선호도, 대체재·보완재 등 다른 상품의 가격 변화, 소비자 수에 따른 수요의 변동과 생산 요소의 가격 변동, 생산 기술 혁신, 미래 가격 예상, 공급자 수에 따른 공급의 변동을 이해한다.
	시장 가격에 대한 오해	시장 가격은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특히 상품의 브랜드나 품질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 효율성과 정부의 개입	시장의 효율성	시장 균형 가격으로 거래될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공정 경쟁 보장을 위한 정부 정책	과점과 독점처럼 경쟁이 제한될 때 공정 경쟁을 위해 정부는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이해한다.
	경제적 유인을 통한 효율성 증진	시장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경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부정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을 이해하며, 이때 보상은 사람들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긍정적인 인센티브, 처벌(벌칙)은 사람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인센티브라는 것을 이해한다.
	정부의 공공재 공급	공공재는 시장에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않으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공공재를 직접 제공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시장 실패로 인해 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과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학습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불공정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 시행, 외부 효과 완화를 위한 경제적 유인 제공, 공공재 공급은 정부의 대표적인 시장 개입 사례이다.

3. 국가 경제 및 국제 경제 이해

국가 경제 및 국제 경제의 이해 영역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 과정, 경제 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응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내용이므로 학습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학습 개념으로는 경제성장과 경기 변동, 물가와 인플레이션, 고용과 실업, 무역과 환율이 해당된다.

가. 경제성장과 경기 변동

경제성장은 중요한 개념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이 고용과 실업처럼 생활 속에서 직접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한된 분량 내에서 학습 개념으로 추가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전문가가 많았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개념이지만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경제 규모가 확장됨을 파악하는 정도의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조 개념으로는 GDP/1인당 GDP, 경제성장률, 경기 변동과 정부 정책을 선정하였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인 GDP와 1인당 GDP,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경제성장률에 대해 이해한다. 또한 명목과 실질 개념을 이해하며 경제성장은 실질적인 경제 규모의 증가 또는 생활 수준의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학습한다.

경기 변동은 뉴스 등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 내용이다. 특히 경기는 상승 국면과 하강 국면이 순환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정부와 중앙은행은 각각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통해 급속한 경기 변동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나. 물가와 인플레이션

물가는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거시경제 지표이다. ‘물가와 물가 지수’에서는 물가와 물가 지수의 개념, 물가 변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물가 지수 중에서는 실생활과 관계가 깊은 소비자 물가 지수(CPI)를 중심으로 물가 지수가 무엇인지와, 물가 지수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다룬다. 물가는 화

폐 가치의 변화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과 연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감소시켜 구매력을 약화시키기도 하지만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주기도 하는 등 인플레이션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 고용과 실업

실업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정착 과정에서 직면하기 쉬우며, 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이러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업에 대한 이해를 학습 개념에 포함시켰다. ‘고용과 실업’의 보조 개념으로 실업의 원인과 영향, 정부의 고용 및 실업 대책을 선정하였다. 북한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실업이라는 상황에 놓일 경우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능력 혹은 시장경제체제를 탓하거나 경제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업은 경제 악화나 산업 구조의 변화, 계절적 요인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직업 탐색을 위한 자발적 실업이 있다는 점, 실업은 개인이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업은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며, 국가는 실업을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 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개인이 실업 상태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실업급여제도,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제도와 대책을 마련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라. 무역과 환율

국가마다 생산 조건이 다르므로 무역이 필요하다는 점을 남북한 무역의 특징을 비교하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에서 외국과의 교역은 당에서 주도하고,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중국이나 러시아와 극히 제한된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원, 노동, 자본의 국가별 분포가 달라 국제 분업과 무역이 발생하며, 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역을 중심으로 무역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무역을 통한 이익이 자유 무역에서 극대화되지만 다른 요인을 고려한 보호무역주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환율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표 4-6> '국가 경제 및 국제 경제 이해' 영역의 학습 내용

학습 개념	보조 개념	보조 개념의 학습 내용
경제성장 경기 변동	GDP/ 1인당 GDP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인 GDP와 1인당 GDP의 의미를 이해한다.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이란 일정 기간 동안 한나라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명목과 실질 개념을 이해한다.
	경기 변동과 정부의 역할	경기는 상승 국면과 하강 국면이 순환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과정별로 정부와 중앙은행은 각각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통해 급격한 경기 변동을 조정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물가와 인플레이션	물가와 물가 지수	가격과 물가의 차이, 물가 변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물가 지수 중 실생활과 관계가 깊은 개념인 소비자 물가 지수(CPI)를 중심으로 다루며,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인플레이션의 영향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감소시켜 구매력을 약화시키기도 하지만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이해한다.
고용과 실업	실업의 원인과 영향	실업은 경제 상황이 나빠지거나 산업 구조의 변화, 계절적 요인, 직업 탐색 등의 이유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실업이 개인과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한다.
	정부의 고용 및 실업 대책	국가는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며, 실업에 따른 개인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개인도 실업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무역과 환율	무역의 필요성	자원, 노동, 자본의 국가별 분포가 달라 국제 분업과 무역이 발생하며, 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역을 중심으로 무역 원리를 이해한다.
	환율의 개념	환율의 개념과 환율의 결정 원리를 이해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환율 변동의 영향	환율 변동이 개인의 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한다.

중국 등 타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환율의 개념과 환전 시 고려할 사항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율 변동에 따른 유불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4. 금융 생활 이해

금융 생활 이해 영역은 현재도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경제교육이다. 개인 금융 영역에 익숙하지 않으면 은행이나 신용카드 이용 등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금융교육은 소비 및 저축 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 이해와 실습에 국한되어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심화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주민들의 저축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공금융에 대한 신뢰가 낮고, 북한 원화 및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공식 금융 기관보다는 사금융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개인과 가계의 저축과 투자가 경제 순환의 일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금 중개를 위한 고도의 금융 시스템이 발전하였다. 또한 각종 금융 상품 및 신용을 통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이 시장경제체제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습 개념으로 ‘수입과 지출’, ‘자산 관리’, ‘신용과 위험 관리’, ‘금융 피해 방지 및 대응책’을 선정하였다.

가. 수입과 지출

북한과 비교해 남한의 가계는 근로 소득뿐 아니라 다양한 소득 원천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의 발달로 이자 등의 금융 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밖에 사업 소득, 이전 소득 등이 존재한다. 지출 측면에서는 세금, 사회 보험료 외에도 대출 이자와 같이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고정적인 지출이 있다. 북한에서도 세금을 납부하나, 납세 부담이 정권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만큼 북한에서의 납세 의식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세금의 필요성과 혜택을 함께 교육함으로써 납세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인지하도록 한다. 또한 가계는 실업 등 일시적 요인 혹은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수입)과 소비(지출)의 변동에 따라 자금 부족을 겪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

한편, 이자율이 자본을 빌리거나 저축하면서 발생하는 대가라는 것을 알고, 다양한 이자율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북한에서는 가계 대출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명목 및 실질 이자율, 고정 및 변동 이자율, 공금융 및 사금융 이자율 차이를 학습 내용으로 선정했다.

이러한 사항을 기반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기대 수입과 지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소득, 저축과 투자, 고정지출과 변동지출 등을 고려하여 예산 관리 계획을 세우며, 이때 다양한 소득의 종류와 총소득, 처분 가능 소득, 예산 제약 내에서의 합리적

소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나. 자산 관리

앞의 학습 개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과 소비의 변동이 발생하고, 이때 자산 관리의 방법과 원칙 등을 학습함으로써 체계적·계획적 자산 관리를 통해 가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우선 저축과 투자의 개념상 차이점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때 북한이탈주민에게 생소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자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자기 책임하에서 투자하는 자세를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재무 목표에 맞는 저축과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예금 및 적금의 저축 상품과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등 투자 상품의 특징을 이해하여 실질적인 금융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산 관리의 원칙, 투자 결정 시 안전성·수익성·유동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예금자 및 투자자보호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활용 방법을 파악하고, 이러한 제도하에서도 의사결정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을 이해한다.

다. 신용과 위험 관리

북한이탈주민은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정착 초기 신용 기록이 없기 때문에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신용 점수의 의미와 신용 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신용의 의미와 신용 거래에는 이자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효과적 신용 관리 방법을 이해한다.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이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적으므로, 보험 및 연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에서는 보험의 운영을 국가가 담당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유일한 보험 회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가 기관, 기업,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을 제공한다. 주민들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아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한다. 따라서 남한의 보험에는 사회

보험과 민영 보험이 있다는 것과, 주요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 범위, 기간, 보험료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는 생계가 결핍되었을 때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연로 연금, 노동 능력 상실 연금, 유가족 연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통일부, 2024; 『SBS 뉴스』, 2024). 따라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예측해 보고, 연금의 종류에는 공적 연금·퇴직 연금·개인 연금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며, 연금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학습한다.

라. 금융 피해 방지 및 대응책

북한이탈주민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취약하므로 사기 피해 예방 및 발생 시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 피해 방지 및 대응책을 학습 개념

<표 4-7> '금융 생활 이해' 영역의 학습 내용

학습 개념	보조 개념	보조 개념의 학습 내용
수입과 지출	이자율(금리)	이자율이 자본을 빌리거나 저축하면서 발생하는 대가라는 것을 알고 다양한 종류의 이자를 이해한다.
	생애주기별 수입과 지출	일시적 요인 또는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수입)과 소비(지출)의 변동이 발생함을 이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파악한다.
자산 관리	저축과 투자	저축과 투자의 차이점을 알고 각 상품의 특징을 이해한다.
	자산 관리의 원칙	자산 관리의 원칙, 투자 결정 시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이때 수익성과 안전성 사이에 반대급부의 관계가 있음을 이해한다.
	예금자/투자자 보호제도	예금자 및 투자자보호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활용 방법을 파악하고,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음을 이해한다.
신용과 위험 관리	신용 관리	신용의 의미와 신용 사용 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효과적 신용 관리 방법을 이해한다.
	보험	보험에는 사회 보험과 민영 보험이 있으며, 주요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 범위, 기간, 보험료 등을 이해한다.
	연금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예상하고, 연금에는 공적 연금과 퇴직 연금, 개인 연금이 있음을 파악하고, 세금, 물가, 기회비용 등의 연금 선택 시 고려 사항을 이해한다.
금융 피해 방지 및 대응책	금융 피해의 유형	피싱, 스미싱, 파밍, 해킹 등 금융 피해의 유형을 안다.
	금융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	금융 거래 시 계약(약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이해한다.

으로 선정하고, 금융 피해의 유형, 금융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을 보조 개념으로 선정했다. 한국의 시장경제체제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금융 사기의 종류, 금융 사기 예방 방법 및 사기를 당한 후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한다.

5. 현장 실습 및 상담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습 개념은 현장 실습 및 상담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별도로 구성하였다. 학습 개념으로는 신용회복제도, 부동산, 세금, 보험과 연금, 창업과 폐업을 선정하고, 각 개념에 대해 실무적인 측면을 익히도록 하였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는 자산 형성 및 관리를 위해 중요하다. 주택 거래(매매, 전세, 월세) 및 공급 제도(청약 저축), 공공 임대 주택, 주택 관련 보증 및 보험, 임대차 보호 등 관련 제도 중 필요한 부분을 학습하도록 한다. 특히 임대 계약처럼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부동산 절차에 대한 이해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거주지를 확보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납세 의식을 가지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각종 세금 제도의 운영 원리와 납세의 의무와 정부 지출에 대해 이해하고 납세자로서 알아야 할 조세 제도를 익힌다.

창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과 폐업을 학습 개념에 추가했다. 관련 제도를 적절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창업 및 폐업의 방법과 절차, 소상공인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 4-8> '현장 실습 및 상담' 영역의 학습 내용

학습 개념	보조 개념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신용사용 서약서
부동산	부동산 거래 절차, 임대차계약서 이해, 부동산 법률 기초
세금	세금의 종류와 필요성
보험과 연금	보험 가입 시 고려할 점, 약관 살펴보기, 연금의 종류와 필요성
창업과 폐업	창업·폐업의 방법과 절차, 소상공인지원제도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와 사회주의 대가정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집단주의 교육을 받고 살다가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찾아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인 남한으로 넘어왔다.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잘 적응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에서 교육받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유지하고 있어, 경제교육의 목적과 내용 면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 일부 시장화가 진전되었다고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부분적으로 반(半) 합법화된 시장경제체제와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계획경제체제라는 이중 경제체제에서 교육받고 생활하였다. 북한 학교에서는 여전히 사회주의 신념과 문화를 지닌 노동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계급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한 정치사상 교육에 중점을 둔 경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5개 영역, 20개 핵심 개념과 54개 보조 개념을 선정하고, 보조 개념에서 다룬 학습 내용을 정리하였다. 남북한 경제체제 이해부터 시작해 시장경제의 원리, 국가 및 국제 경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지식 이해와 함께, 현장 실습과 상담을 통해 경제 환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도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생산 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와 국가가 자원의 배분을 담당하는 계획경제체제에서 생활하면서 남한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습득하였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과 북한의 경제체제 차이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며, 그 대가는 선택을 위해 포기한 무엇’이라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기업, 가게 등 경제 주체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의 경우 경제적인 의사결정, 즉 노동과 소비에 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자본주의의 운영 시스템은 물론,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정책이 개인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시장경제체제에서 세금의 운영 원리와 납세의 의무도 이해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서 자본주의의 폐해로 가르친 실업과 인플레이션, 조세 등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며, 이들 내용의 이해를 위해 시장경제체제의 작동 원리와 더불어 가게,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북한에서 은행(공금융)은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금융이 성행하고 있어 남한의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중 경제체제에서의 금융 시스템과 다르다는 것을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 이해를 위한 경제교육 핵심 개념 도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기획하거나 교재를 제작하는 데에 필요한 지침을 제작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본 연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를 참고하여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자료를 제작하거나 교육을 수행할 때 고려할 사항을 몇 가지 짚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경제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익혀야 할 내용은 시장경제체제의 작동 원리부터, 시장과 정부의 역할,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이해까지 매우 많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충분히 익혀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체제의 차이를 설명할 때 시장경제체제는 무조건 옳고 성공과 풍요를 가져다 주며, 계획경제체제는 무조건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설명은 북한이탈주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이상과 현실에 괴리가 있듯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도 이러한 괴리가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연구진은 연구를 위해 수행한 자료 조사나 면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경제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후 남한 사회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2주 동안 하나원에서 사회적응 교육을 받고, 이후 하나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50시간 받는데, 이 중 경제교육은 극히 일부에 그친다. 이들이 시장경제체제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여 남한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하나원에서 경제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지역사회 정착 후 하나센터나 공공기관 등을 통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과의 직접적인 인터뷰나 교육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점이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안보상의 문제가 없는 한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 관련 정보를 더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하나원의 북한이탈주민 교육에 참여하는 강사 등 관련 영역의 전문가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소통은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체제 이해를 위한 경제교육 핵심 개념을 도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핵심 개념을 토대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교재를 제작할 때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충분히 제공하기를 바란다. 추상적인 경제개념이나 이론은 최소화하고, 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정착 기간, 입국 전 제3국에서의 경험 등에 따라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시장경제에 관한 지식이 천차만별인 것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주기별 경제교육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핵심 개념을 이수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심화 학습 개념 연구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7], 2022.12.22.
-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21.
- _____, 『2023 북한이해』, 2023.
- 김경숙, 『탈북민 금융사기 피해 경험에 대한 탐색과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남북하나재단, 2021.
- 김경숙·박주현, 「금융피해경험을 통해 본 탈북민 금융이해력 탐색」, 『다문화사회연구』, 제15권 제3호, 2022, pp.5~35.
- 김수암 외,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의견조사』,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6-18, 2016.
- 김유연 외, 『북한사회변동 2012-202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 김정근·김효주,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이해력과 노후금융준비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노년학』, 제38권 제2호, 2018, pp.291~308.
- 남북하나재단, 『2022 남북하나재단 연간 사업안내』, 2022.
- _____,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2023a.
- _____,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2017~2023b.
- _____, 『2024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업무매뉴얼』, 2023c.
- 『동아일보』, 「北 경제 틀어쥔 ‘돈주’... 당국 비호 속 자본주의식 경영」, 2015. 9. 15.
- 문인철·송미경,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선 방향」,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377호, 2023. 9. 4.
- 박경량 외, 「시장경제 체제 이해도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소득 및 직업 안정성 향상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28권 1호, 2024, pp.51~98.
- 박형중·조한범·장용석,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9-07, 2009.
- 서울연구원, 「서울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은?」, 서울인포그래픽+ no.350, 2023. 12. 26.
- 손상희 외,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생활적응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5권 제3호, 2014, pp.329~357.
- 손정국·김영민, 「통일 후 북한 주민 대상 경제금융 교육에 관한 연구: 행태경제학 관점을 중심으로」, 『문화기술의 융합』, 제7권 제2호, 2021, pp.239~246.
- 손지연·박주영, 「북한이탈주민의 재무지식과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1권 제4호, 2018, pp.55~79.
- 이수룡·이정희·조봉현, 「북한의 금융실태와 개혁방향 및 남북 협력과제」, 『북한학보』, 제43

- 권 제1호, 2018, pp.119~144.
- 이진석,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제20권 제3호, 2020, pp.11~157.
- 정병곤·김병연·이석,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 정영선,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사회화에 관한 질적 연구: 일과 진로를 중심으로」, 『글로벌교육연구』, 제10권 제2호, 2018, pp.3~38.
- 정은찬,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생활 정착: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16.
- 정혁,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소득 및 인적자본 형성에 관한 이해화 정책함의」,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18.
- 조성택 외,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생활문화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정책연구 2020-59, 경기연구원, 2020.
- 조인영·박종민,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정부학연구』, 제26권 제2호, 2020, pp.241~273.
- 통계청, 「2023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3. 11. 8.
- 통일부, 『통일백서』, 2001~23.
- 홍민, 「공식 시장의 규모와 분포 변화」, 『2022 북한 공식 시장 조사 결과: 규모와 분포, 장세 현황, 입지 변화』, 통일연구원 월례토론회 발표 자료. 2022. 11. 23..
-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통일연구원, 2016.
- Eric Fish, 「Chinese Youth in China's Economic Transition: Changing Behaviors and Values」, 『북한 장마당 새 세대: 그들은 누구이며 변화의 동력이 될 것인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15. 6. 23, pp.87~90.
- KDI·서민금융진흥원, 『내 돈을 지키는 사기피해 예방법』, 2020. 12.
- KDI·한국소비자원, 『현명한 소비, 행복한 미래』, 2020. 12.
- 『SBS 뉴스』, 「북한에도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연금' 있을까」, 2024. 4. 26.
- 교육도서출판사, 『사회주의 교육학: 사범대학용』, 1991.
- _____, 『사회주의 도덕과 법, 고급중학교1』, 2013.
- _____, 『사회주의 도덕, 초급중학교2』, 2014a.
- _____, 『사회주의 도덕, 초급중학교3』, 2014b.
- _____, 『사회주의 도덕과 법, 고급중학교2』, 2014c.
- _____, 『사회주의 도덕, 소학교4』, 2015a.
- _____, 『사회주의 도덕과 법, 고급중학교3』, 2015b.
- _____, 『사회주의 도덕, 소학교5』, 2016

Jappelli, Tullio. "Economic literac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Economic Journal*, 2010, pp.429~451.

<웹사이트 및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특별시, 「2023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안내」(<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49873>, 접속일: 2024. 11. 2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접속일: 2024. 11. 27).

_____, 「북한정보포털」(<https://nkinfo.unikorea.go.kr/nkp/main/portalMain.do>, 접속일: 2024. 11. 29).

1.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담당자 FGI 질문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담당자 FGI 질문지

연구 제목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 이해를 위한 경제교육 핵심 개념 도출 연구
일시 및 장소	· 일시: · 장소:
참여자	· 연구진: · 대상자: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경제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교사·학생·일반 국민·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DI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경제교육 내용 체계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집단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합한 경제교육 내용을 추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니 솔직한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DI 경제정보센터

I. 북한이탈주민 현황에 관한 질문

1. 담당하고 계신 지역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상황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2.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2-1. 취업, 창업 비중은 어떻습니까?
3.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I.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에 관한 질문

4. 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로 하고있는 지원은 무엇입니까(교육 제외)
 - 4-1.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5.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하는 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경제교육 제외)
 - 5-1. 주로 어떤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 5-2. 교육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 5-3.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과 교육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5-4. 교육 형식은 어떻습니까(온-오프라인, 강의, 체험, 현장 방문 등)
 - 5-5. 교육을 지원하는 협력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가 있습니까?
 - 5-6.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는 교육은 무엇입니까?
6. 북한이탈주민들이 요청하는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있었습니까?
 - 6-1. 있었다면 어떤 내용, 방법입니까?
 - 6-2. 요청하는 교육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III.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에 관한 질문

7.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7-1. 주로 어떤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 7-2. 교육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 7-3.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과 교육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7-4. 교육 형식은 어떻습니까(온-오프라인, 강의, 체험, 현장 방문 등)
 - 7-5. 교육을 지원하는 협력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가 있습니까?
 - 7-6.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는 교육은 무엇입니까?

8. 북한이탈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제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있었습니까?

8-1. 있었다면 어떤 내용, 방법입니까?

8-2. 요청하는 교육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9.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1.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9-2.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제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IV. 경제교육 평가 및 피드백에 관한 질문

10. 경제교육을 진행한 후 교육생 대상의 설문조사나 평가를 진행했습니까?

10-1. 교육생들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까?

10-2. 교육생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11. 경제교육을 진행한 강사는 교육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1-1. 교육생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이 있습니까?

11-2. 교육을 진행한 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까?

11-3. 교육을 진행할 때 주의 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12. 교육의 전 과정에서 예외사항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V. 기타

13. 북한이탈주민 교육 관련 정책과 관련해 재언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4.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계획 수립과 시행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5.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교육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6.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16-1.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교육을 통해 방지 또는 해결할 수 있었던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17. 현재 KDI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내 정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경제교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이나, 참고할 만한 자료, 기관 등을 말씀해 주세요.

17-1. 특정 전문가를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17-2. 접근 방법에 관한 내용도 좋습니다.

2.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전문가 FGI 질문지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전문가 FGI 질문지


연구 제목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 이해를 위한 경제교육 핵심 개념 도출 연구
일시 및 장소	· 일시: · 장소:
참여자	· 연구진: · 대상자: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경제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교사·학생·일반 국민·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DI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경제교육 내용 체계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수행하거나 교육자료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집단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합한 경제교육 내용을 추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니 솔직한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보센터

I. 경제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관한 질문

1.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2.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 2-1.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했습니까?
 - 2-2. 교육 프로그램 설계 시 가장 고려한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3.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4. 교육을 통한 파급효과는 무엇이라고 예상했습니까?
 - 4-1. 교육 후 예상과 달린 성과를 거두게 된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5. 교육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었습니까?
 - 5-1. 교육생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5-2. 남한에 정착한 기간은 몇 년 정도였습니까?

II. 경제교육 교재 개발에 관한 질문

6.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7. 교육 외에 따로 제공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 7-1. 어떤 자료를 제공합니까?
8. 다른 기관과 협력해 개발한 교육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9. 교재 개발 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III. 경제교육 수행에 관한 질문

10. 교육은 누가 진행했습니까?
 - 10-1. 교육을 진행하는 분들에게 따로 교육이나 자료 등이 제공됩니까?
11.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까?
 - 11-1. 다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12. 교육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13. 교육의 홍보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 13-1 다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입니까?
14. 교육생은 어떻게 모집했습니까?

IV. 경제교육 평가 및 피드백에 관한 질문

15. 교육을 진행한 후 교육생 대상의 설문조사나 평가를 진행했습니까?
 - 15-1. 교육생들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까?
 - 15-2. 교육생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16. 교육을 진행한 강사는 교육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 16-1. 교육생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이 있습니까?
 - 16-2. 교육을 진행한 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까?
 - 16-3. 교육을 진행할 때 주의 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17. 교육의 전 과정에서 예외사항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V. 기타

18. 북한이탈주민 교육 관련 정책과 관련해 제언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9.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계획 수립과 시행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교육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1. 현재 KDI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내 정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경제교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이나, 참고할 만한 자료, 기관 등을 말씀해 주세요.
 - 21-1. 특정 전문가를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22-2. 접근 방식에 관한 의견도 좋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 이해를 위한 경제교육 핵심 개념 도출 연구

인 쇄 2024년 12월 27일

발 행 2024년 12월 30일

저 자 송인호 · 주호성 · 공은주

김은숙 · 정성진 · 곽지용

발행인 조동철

발행처 한국개발연구원

등 록 1975년 5월 23일 제6-0004호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전 화 (044) 550-4114

팩 스 (044) 550-4310

© 한국개발연구원 2024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 이해를 위한
경제교육 핵심 개념 도출 연구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EL 044-550-4114 FAX 044-550-4310
www.kdi.re.kr